

교육생각은

여러분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금은 느린 호흡으로 길게 보면서

현상의 이면을 지배하는 근본을 고민합니다.

교육이 지배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저항하면서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고민을 담아

교육담론지 <교육생각>으로 세상에 다시 나서려합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길

서로의 연대 속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근본을 잊지 않는 계간 <교육생각>으로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간 <교육생각> 정기구독

- 구독료 _ 매월3천원 이상 / CMS신청 또는 계좌이체
- <교육생각>을 구독하시면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총)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소식 등을 우선으로 알려드립니다.
- 정기구독 및 후원문의

전화 070-8234-1319 / 홈페이지 antihakbul.jinbo.net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임시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교육생각

2011년 겨울호 통권4호

장위국 교육감

“어째 내 판단이 미지근아네...”



2011년 겨울호 통권4호

【기획】 '00대학' 학격 현수막을 때라

【강연 뒷풀이】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영화리뷰】 때론 가벼운 깃털처럼

【교육운동 진단과 모색】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기고】 한국의 젊은이에게 삼성의 의미를 묻는다

【우리의 주장】 자율빨간 강제학습노동,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교육생각

| | | |
|----|-------------------|---|
| 기획 | '○○대학 합격' 현수막을 떼라 | |
| | 무엇이 문제인가 조재호 | 1 |
| | 반대운동의 성과 박고형준 | 4 |
| | 고3생 눈으로 보니 이현근 | 7 |

썩은 뿌리 자르기

| | |
|---|----|
| 학별사회 다시보기 조배준 | 10 |
|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한 물음은 우문우답(愚問愚答)인가? 김광호 | 16 |
| '네' 등급을 알라!'는 사회, 그러나 '네' 자신을 알라' 박종성 | 21 |

고3을 생각하다

| | |
|--------------------------------|----|
| 고등학교 3학년, 배움에 심장을 들고 다닌 병가상사 | 28 |
| 수능과 함께 끝난 청소년기 후기 루블릿 | 32 |

2011년 겨울호 통권4호

| | | |
|---------------|--|-----------------------------|
| 강연 뒷풀이 |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김현석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 오창환 | 34 45 |
| 영화리뷰 | 때론 가벼운 깃털처럼! 느루 | 57 |
| 교육운동 진단과모색 |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공현 화월주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의미 설상숙 | 60 66 |
| 기고글 | 존댓말로 읽는 헌법 – 개헌 차진태 타블로 학력논란에 따른 정보권문제 정민경 조그만 변화가 이룬 커다란 결실 하정호 한국의 젊은이에게 삼성의 의미를 묻는다 지훈 현병철 자진 사퇴해야 박고형준 | 70 78 86 90 105 |
| 우리의 주장 | 학별없는사회 성명서, 논평 수록 | 1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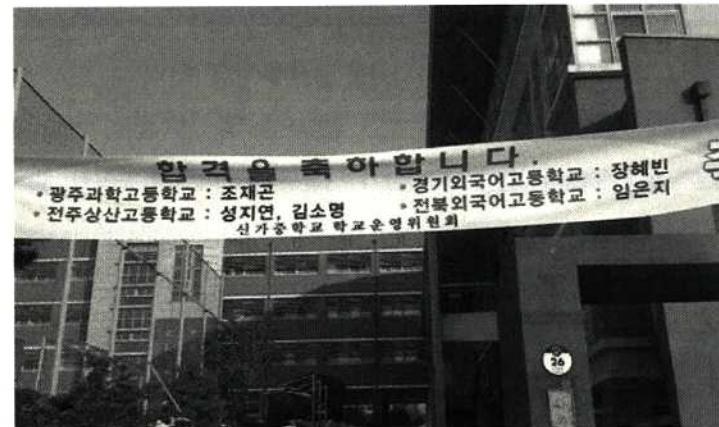
웹진 antihakbul.jinbo.net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만평 안정혁 · 편집일
꾼 박고형준 오창환 정창호 · 비매품

‘○○대학 합격’ 현수막을 떼라¹⁾ – 무엇이 문제?

추한 욕망 쫓는 학교, 보편교육 포기

“차라리 모든 학생의 이름 걸어라”

조재호 | 초등교사



▲ 특정학교 합격률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 것'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에도 여전히 현수막이 내걸리는 현실이다.

태양의 신,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로 신의 별명은 스민테우스' 다. 스민테우

- 1)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성적 및 대입 합격 결과 내용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지 오래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상급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 짓는 것이고, 상급학교 합격자 중에서도 소위 명문학교 합격자를 구분함으로써 학력과 학별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다'는 국가인권위 진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쉬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운영위' 명의로 현수막을 내거는 편법을 쓰는 학교도 있다. 이에 학별없는 사회는 광주드림 신문사와 함께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교육운동 활동가의 눈에 비친 학교 현수막 게시 문제를 짚어봤다.

스는 쥐를 쓸어버리는 신'이다.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어느 대학 선생님은 결국 법정에 서야 한단다. 국운 운운하던 G20. 별 것 없이 끝났지 않은가? 남는 것 없는 그 행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스민테우스 신의 노여움과 함께 '쥐그림'이 그려진 포스터만 양상하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은 우리가 사는 곳곳에 펼쳐져 있다.

동네 곳곳을 차지한 학원들에는 영업 광고로서 자기학원생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진학한 학교 뿐 아니라, 심지어 토익·텝스 점수까지 상세하게 적어놓고 '고객' 이름과 함께 학교를 살포시 옆에 적어둔다. 도시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흉측한 모습이지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짓이려니 한다. 다만 '불만제로' 같은 곳에서 과연 저 광고가 허위광고가 아닌지 꼼꼼히 찾아봐주세요' 하는 제보를 하고픈 욕구가 일기도 한다. 게으른 소시민인 나는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학교 정문 위에 촌스럽기 그지 없는 현수막에 양상하게 몇 명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본 후에는 느낌이 달라진다. 심한 역겨움이 몰려와 토가 쏟아져 나올 듯하다. 고등학교 뿐 아니라, 일부 중학교에서 발견되는 '명문고 입학 현수막'이 그 것이다.

이 현수막을 건 분들의 욕망은 뭘까? 아마 이런 것일 게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갔으니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학교로 뻥뻥이로 오게 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선배처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이 욕망은 매우 추하다.

우선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봐도 역겹다. 청소년기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할 학교가 동네 현수막 업체가 제작한 천조각에 이름, 혹은 공부에 찌든 학생 얼굴을 양상하게 그려넣은 모습을 보

면서 학교에 등교한다는 것은 고욕이다.

둘째, 학교가 이제 학원마케팅을 수입한 그 아찔한 미감이 역겹다. 광주 어떤 중학교는 '혁신학교'를 신청했다. 그 학교 교문위에 '학교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상산중 ○ 명, 외고 ○ 명~ 이렇게 적혀진 현수막이 있다. 신정환이 도박 후에 파문이 일자 올린 데기열 병상사진 느낌이 난다.

학교 혁신을 하겠다면서 나선 선생님들은 도대체 뭘 혁신하겠다는지 회의가 듦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학교에 명문대 현수막을 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신가?

셋째, 일부 언론에서 진보교육감의 진학 현수막 자체 공문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는 각 학교급별로 각각 교육과정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을 뿐, '진학' 같은 것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일부 학부모와 '애향심' 가득한 광기어린 한줌도 안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보편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졸업을 축하하고, 진학에 박수를 보낼 거라면, 각 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현수막에 올려야 한다. 대형 걸개그림으로 모든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를 내거는 것이 문화도시 광주에 어울리는 학교가 아닐까?

이 현수막 문제는, 교육위화감 조성이나, 학교자부심과 관련한 문제나가 아니다.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도시 아름다움의 문제다. G20포스터에 '쥐새끼를 그려 넣어야만 했던 선생님도 이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추잡한 그림에 뭔가를 첨가해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길을 가다가 일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마주치는 진학 현수막을 보면서 나도 '쥐'의 신이신 아폴로, 스민테우스를 불러보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요동친다.

스민테우스여, '쥐'의 신이여. 이 불결함을 쓸어버리소서!

'○○대학 합격' 현수막을 떼라—운동의 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불구 제도적 금지 장치는 미흡

박고형준 | 학별없는사회 상임활동가



▲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이 현수막 게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 모습

이른바 '명문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어김없이 교문 앞에 걸린 현수막들, 정말 꼴불견이지 않나? 이 같은 위화감, 입시경쟁, 학별사회를 부추기는 현수막을 문제 삼고자, 2006년 광주지역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반대'

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결성해 지속적인 각급 학교 모니터링, 진정·민원, 캠페인, 일인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집단진정인데, 사건 처리결과만으로 보면 인권위가 정말 알미워 죽겠다. 해당학교가 현수막 게재행위를 지양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기각'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이 차별행위로 인정되고도 권고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지만, 당시에 문제 삼았던 학교만큼은 현수막이 철거되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최근 광주·강원·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정학교 합격자 게시물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2011년 역시 시민모임은 이 문제에 대한 각급 학교 모니터링 및 사례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일선학교가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초·중학교에는 특목고-자사고-국제중 등 이른바 '귀족학교 합격' 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놓으며, 한 차원 높은 입시경쟁 현장을 체감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인권위의 안이한 대처' 와 '실효성 없는 시교육청의 자제요청' 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차별행위 인정에 걸맞는 합당한 조치, 즉 인권위 권고나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해결책이라고 본다.

2007년,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 이라는 제정이유를 거창하게 밝혔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개인

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어도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허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는 학력을 포함한 보수집단이 반대한 7개 조항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차별금지법은 결국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한국사회에서 학벌·학력 등 차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은 각종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기본법이자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으로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학벌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과 경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현 정부 시대에 가당찮은 바람을 품는 걸까?

바람에 나부끼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 현수막을 무심히 보아 넘기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된 만큼 시교육청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인권 위는 하루 빨리 ‘권고조치’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길 간절히 바란다.

‘○○대학 합격’ 현수막을 떼라고 3 눈으로 보니

“학생 아닌 어른들 자랑거리”

이현근 | 인성고등학교 학생



▲ 교문 위에 특정학교 합격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은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른들의 자랑하고픈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내걸린다.

수능이 끝난 지 어느새 두 달이 훌쩍 흘렀다. 그 두 달 동안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두근대며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해방이라며 놀아 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낙담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많은 학교들은 얼마나 더 많이 SKY에 학생들을 보냈는지 자랑하느라 바쁘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교문 앞에 떡하니 보이는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내지는 특목고 합격 몇 명과 같은 현수막들. 마치 요즘 학생들이 자기네 아파트가 몇 평이고, 부모님이 연봉과 재산이 얼마나 따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학교는 누가 더 잘났는지를 자랑하느라 안달들이다. 학생들이 철없이 내뱉는 소리들에 일명 못사는 집 학생들은 소외되고 또 상처를 받곤 한다. 그런데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학생들의 그것과 과연 뭐가 더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다. 자랑하는 소리 듣는 게 아니꼬우면 공부하든가와 아니꼬우면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든가, 그 사이.

학생들 자신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학생들이 12년 동안 학교라는 감옥 안에서 지내는 걸 불쌍하게 여긴다. 밖에서 조금이라도 더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나 파고 있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삶의 통과의례로 여긴다. 옆집 누가 어디를 갔고, 친구 누가 어디를 갔고, 공부 잘하던 누군가 수능을 망해서 재수를 했다는 식의 입소문이 돌고, 그걸 현수막에 걸어 내보이는 것도 결국 그 때문이다. 잘했으니까 잘한 학생들은 이름이 널리 팔리고, 못한 녀석들과 아직 고3이 아닌 학생들은 그걸 보고 반성 내지는 각성하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본보기랄까. 웃긴 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저 어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할 수 없고 그 삶들이 누군가를 위한 장식품이 아닌데도, 어른들은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입맛에 맞게 골라 치장하기 위해 그것들을 소비한다. 새삼스

러울 것도 없다. 어차피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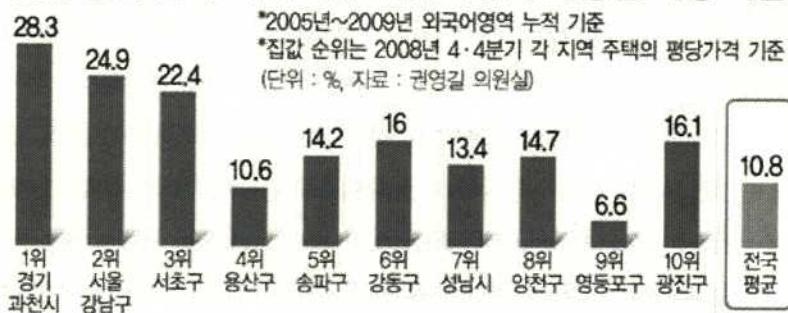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모든 학교들이 현수막을 내린다고 또 내리라고 공문을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저 현상만 없어질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았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발버둥 쳐봐야 너만 손해라고 그나마 말이라도 하던 학생들.

특정학교 현수막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수막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자와 진학하지 않은 자, 더 나아가 진학한 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학교에 진학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학벌을 조장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제도와 학교라는 체제와, 그리고 어른들이라는 존재가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눈에 보이는 차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등한시해도 되는 건 아니기에, 이제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는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면 싶다.

학벌사회 다시보기¹⁾

조배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집값 상위 10개 지역 거주 학생 수능 1~2등급 학생 비율



▲ 부모의 재산·학벌 '대물림 현상' 통계가 증명

대학' 이라 쓰고 '학벌' 혹은 '낙인' 이라 읽는다

한국사회에서 학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속 시원히 말하기 어려운 것은 집권자들과 시민 모두 자본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하여, 주로 그것을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용하면서도, 그 욕망구조가 까발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그것은 국가의 교육과 주택에 관한 역할과 정책이 그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현상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어떻게 하든 홀로 살아남기, 자본주의가 가르쳐 준 원리를 습득해서 보다 더 경쟁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기로 드러

1) 웹진 '시대와 철학' (<http://www.ephilosophy.kr>) 기획시리즈에서 발췌했다.

난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에 관한 문제가 서열화, 사교육, 학벌의 문제로 사람이 살아가고 서로 어울리는 주택과 토지의 문제가 과도한 대출, 투기, '먹튀'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 말이다.

그런데 학벌이라는 사회적 자본과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경제적 자본을 통해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을 것도 없으면서 '나도 언젠가, 혹은 나의 자식들은 언젠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그 병폐를 공고화하는 공범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진 것이 많기에 잊어버릴 것이 불안한 자의 두려움과, 가진 것이 없기에 끊임없이 탐하고 불안한 자의 두려움은 그 근원이 같을까, 다를까. 학벌사회와 부동산사회 때문에 고통 받으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작동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인민들의 욕망구조는 대학을 학벌 혹은 낙인이라 부르게 만들고, 육아와 교육과 주거와 노후복지를 모두 '경제문제'라고 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굴레에 갇혀 악다구니하는 한 이 지루한 논쟁과 입시지옥이라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며 이윤만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자본의 논리가 계속 강해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존재양식은 변함이 없는 데,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서울대가 기초학문 연구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재편되고 평준화된 국립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대학서열화가 사라질까. 대학서열화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만큼 부모가 경제력이 있고 비교적 똑똑하고 성실하지만, 사회의 지배권리에 대한 의심은 희박한 아이들이 모이는 '유사서울대'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경쟁력 있는' 재단이나에 따라, 즉 얼마나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기업화되느냐에 따라 더 세분화된 서열이 매겨지지 않을까. 이렇듯 학벌

문제는 한국의 뒤틀린 경제성장 속에서 ‘괴물’이 된 입시교육이라는 암 덩어리의 대표적인 증상일 뿐이다. 그래서 학벌 문제는 교육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교육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대학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는 세부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부모들은 한숨 쉬고 아이들은 더 피곤해질 뿐이며, 사교육산업 자본과 거기에 기생하는 스타강사만 덩달아 미친 춤판을 옮길 뿐이다. 교육 시장을 지배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를 훈육하고 규율하는 한 학벌에 의한 사회의 보수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교육열에 의한 개인적·가정적·국가적 ‘자해 쇼’는 계속 될 것 같다.

국가와 학벌

과연 한국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세력은 땅값과 집값이 떨어지고 대학서열화가 약화되는 것을 기만하고 있을까. 서울시장은 학교의 무상급식은 퍼풀리즘 정치일 뿐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적’ 복지이기 때문에 뭔가 두려운 것인가 보다. 그렇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격차와 차별, 불평등과 경쟁이 이 땅의 지배원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화법은 무척 단순해서 자신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기 위해 늘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가져다 쓴다.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단지 그들의 지배체제와 이익구조에 대한 위협을 말하는 것임을 마치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듯이.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학벌은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다. 물론 현재의 학벌체제는 봉건시대의 엘리트를 규정지었던 족

벌과 문벌의 근대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제가 이식한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고 국가권력에 종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와 그것을 확대재생산할 교육체제의 마련을 위해, 그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거의 무한대의 상징가치를 부여하는 것. 물론 이러한 원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교육 ‘인적자원’ 부 시절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국가가 보증하는 학벌로서의 서울대는 오늘날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수로 고등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만 봐도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경성제국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필기시험에 가장 능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최고의 학벌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학벌투쟁은 계급쟁투인가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대학이 달라질 경향이 크고, 졸업한 대학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여전히, 아니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면 이미 현재의 ‘학벌투쟁’은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쟁취하고 계급적 수준을 결정할 중대한 사명을 띤 계급쟁투의 현장이며,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말이다. 만약 불공정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 게임의 룰을 벗어나는 것이 곧 그 세계에서의 회복불능을 뜻하거나, 게임의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곧 지독한 패배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용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민주화를 견인했던 386, 이제는 486이 된 ‘그들’도 대부분 그러했다. 그들은 좋은 학벌도 대기업 취업에 바로 써먹히지는 않는 요즘 같은 시대에 20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안도했다. 그들은 양화된 격차

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정된 사회적 자본을 미리 배분받아 버리고 자신의 등급을 스스로 낙인찍게 만드는 이 불합리한 게임에 대리인으로 임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80년대의 그들처럼) 이의제기를 하기보다는 기꺼이 그 게임의 승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다. 물론 이 학벌 따기 게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게임에서 승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게임을 벗어나 또 다른 ‘게토’에 소속되더라도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에 뒤늦게 그 게임 판에 한 발을 넣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나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비싼 게토이다. 그런데 교육과 대학입시 문제, 나아가 취업을 위한 그 다음의 쟁투를 ‘제로섬 게임’과 ‘죄수의 딜레마’로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 자체가 우리의 지적실천적 탈출구를 닫아버리고 있다.

입시교육의 상처와 신화를 응시하기

자의반 타의반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는 교수님들도 어느 순간에 경기고와 경복고를 따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린 시절 입시전쟁의 ‘승자’로서의 우월감은 그들의 도덕적 삶과 학문적 업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필자가 고교시절 경험했던 우열반과 보통반의 극심한 차별은 필자의 의식 깊은 곳에 어떤 열매감을 남겨 놓았을까. 일류 대학을 나온 부모들은 그 사회적 특혜를 잘 알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 차별과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흔히 어느 집이나 ‘잘 키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된다. 학벌투쟁은 온갖 부당거래와 비리가 관행이 된 기업 중심의 사회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85%가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학벌의 권능에 별별 떨어야 하는 우리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여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문제를 제기했던 ‘타진요 사건’

같은 해프닝을 경경언론이 진지하게 다루고 뒤쫓을 만큼 우리에게 학벌 (혹은 누군가의 특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배후와 우리 내면에 깊은 생채기를 가져왔다. 저마다의 내면이 응시되고 조금씩 말과 행동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과 제도도, 학교와 교육도,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 문제를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생존수단이자 혹시 모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입시문제로 축소환원시켜버리고 그 게임에서 충실히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망을 먼저 성찰할 때 어린 세대들의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매만질 수 있지 않을까.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 받는 학교, 창의성이 피어나는 교실은 그 다음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0대들의 삶을 저당잡고 그들에게 이것은 인생을 건 멋진 한 판 싸움이라고 사기 치는 건 이제 그만하자. 그들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비정규직의 실상과 그들이 장차 ‘교수님’이라고 부를 대학 시간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 같은 것을 주면 1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한 물음은

우문우답(愚問愚答)인가?

김광호 | 서울시립대 석사과정

질문놀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망상(妄想)하는 습관이 생겼다. 망상놀이의 즐거움은 엉뚱한 질문과 대답이다. 단순한 예로, 쥐가 낙동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 오리발로 헤엄쳐서? 전용보트를 만들어서? 아! 보로 건널 수 있겠구나! 이 놀이의 시작은 질문이며, 조금씩 변형시켜 계속 질문한다. 윤리적 규범을 생각하면 우문현답(愚問賢答)을 해야겠지만, ‘혼자만의 산책’ 이기에 ‘우문우답(愚問愚答)’으로 끝난다. 시춘기에 끝냈어야 할 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나의 경우 건망증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치함이 더 큰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학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일까 아니면 풀 수 없는 질문일까? 만약 풀 수 있고 사회적 의제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면 몇 번째에 해당할까? 한국사회는 학벌사회일까? 이에 대해 몇 %나 반대할까? 한국의 학벌사회가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몇 %나 찬성할까? 만약 불공정하다면 그것을 극복할 의지를 가진 사람은 몇 % 정도일까? 만약 그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없앨 수 있을까? 모두 없애지 못한다면 그 대학들을 평준화할 수 있을까? 평준화를 할 수 없다면 대학입시만이라도 없앨 수 있

을까? 대학입시를 없앨 수 없다면 선발방식이 아니라 추첨방식은 안될까?

이 질문들을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고,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우문우답(愚問愚答)의 동호회원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답은 질문 속에 있고, 인간은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마련인데, 질문의 연쇄가 현실적으로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 부모님과 나는 전우(戰友)

‘학벌사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교육문제이면서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은 한국사회의 커다란 욕망거울이었고,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꿔왔다. 그리고 그 정책의 지렛대는 언제나 대학과 그 입시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입시전형이 다양화되면서 소위 ‘수능’에 대한 관심은 과거 ‘학력고사’에 대한 관심보다 줄었다. 그러나 과거 고사장 앞에서 옆을 붙이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모습보다 각 대학 입시설명회장을 뛰어다니는 부모님의 모습이 더 강조될 뿐이다. 형태는 바뀌어도 ‘병목현상’처럼 대학입시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 졸업생의 85%가 넘게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적으로 보면 대학입시와 관련된 경쟁이 없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학벌사회에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보도를 마련하였다. 기사 내용 가운데 2006년 대학졸업자 월평균 소득을 소개했다. 1~5위권 대졸자 227.5만원, 6~10위권 대졸자 205.4만원, 11~30위권 대졸자

193.9만원, 그 외 4년제 대졸자 169.0만원, 전문대졸자 158.0만원. 이를 기계적 방식으로 분석하면, 대학이 등수로 매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서열화와 소득의 등급이 연동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등급이 소득의 등급을 결정한다.

예시가 소득 차이만을 제시해 단편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자신의 경험 이든 가공된 공포 혹은 불신의 이야기든 학력과 소득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현상이다. 물론 이것이 반례(反例)적 개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조와 믿음 속에서 대학 서열의 정점에 오르려는 이 전쟁에서 내 부모, 나 그리고 내 자식은 쉽게 ‘전우(戰友)’가 된다.

학벌사회 속에 강화되는 불공정한 경쟁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장(戰場)’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다. 보수진영의 경우 교육정책의 ‘개혁’의 외양은 기회와 선택의 다양성이 다. 단순한 학력고사에 따른 단순한 서열화보다 다양한 전형을 통한 기회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진보진영의 경우도 학력고사에 따른 서열화의 문제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화가 기회와 선택의 다양성보다는 사교육을 매개로 사회적 양극화의 재생산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지난 달 30일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별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소위 ‘일제고사’의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 결과를 보도한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선 사립학교가, 중학교에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고등학교에선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가 성적 상위 20위권을 휩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하

위 20위권에는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가 다수를 차지해, 지역에 따른 학력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속에서도 ‘개천의 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내놓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외고 교육 실태’ 보고서를 인용한 모 주간지의 보도를 보자. “외국어고 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비율은 49.4%지만, 일반고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23.8%). 사교육 참여도 달랐다. 외국어고 학생 10명 가운데 9명꼴(88.7%)로 사교육을 받지만, 일반고에서는 65.3%만이 사교육을 받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도 외국어고 학생이 45만3천원으로 일반고 학생(22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인용문을 끌어들인 것은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이 출발점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제도는 ‘학력고사’에 의한 전국적 서열화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기회와 선택의 다양성이란 가면을 쓴 부모들의 돈 잔치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불공정한 정글 속에서 경쟁은 오히려 강화된다. 그 속에서 대학의 서열화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목적고를 매개로 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서열화의 극복 없이 학벌사회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럼 대안은? 그 동안 많은 교육학자와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많은 논의과정은 학벌사회의 극복이란 종론적 방향에 동의하지만, 그 실현의 구체적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함을 보여준다. 진보정당의 경우 ‘국공립대의 통합네트워크’ 내지 ‘통합단과대 체제’를 통해 최소한 국공립 대부터 서열화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진영의 대안 제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항상 외면을 당한

다. ‘누더기 법’ 같은 교육 정책의 변화는 교육 정책에 강한 불신과 공포가 자리 잡게 만들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 사교육을 통한 내 자식 밖에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장(戰場)’에서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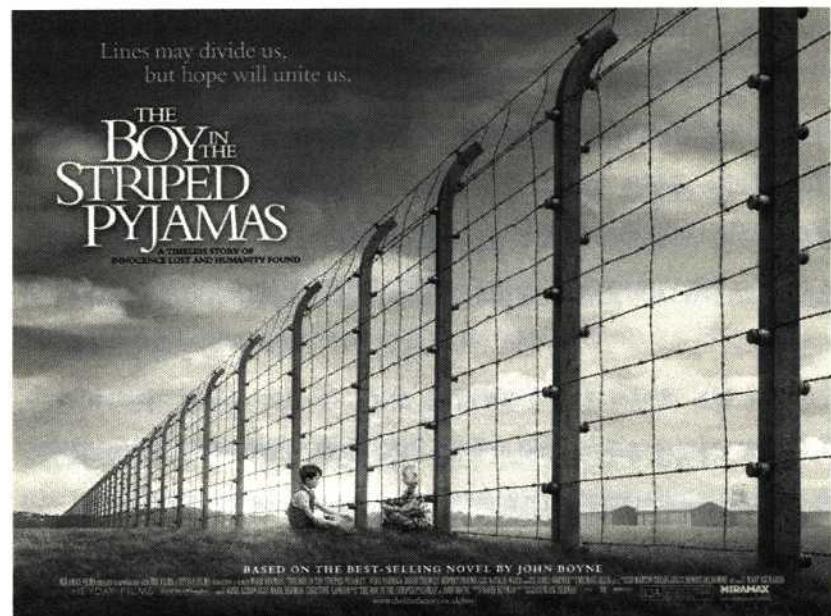
따라서 학벌사회의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는 어려우며, 먼 길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 내지 축소해가기 위한 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학벌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출발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더라도,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에 대한 열망과 공교육 과정의 고행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에 근거한 프리미엄의 유혹과 공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학벌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내딛기 어렵기 때문이다.

축구에 대해서 많은 남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대스리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축구대표의 경기력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포털의 토론장은 벌집이 된다. 교육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경우 벌집이 될 가능성성이 높다. 그러나 대학서열화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제도의 변화와 그 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 학벌사회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면, 그 벌집을 우리는 건드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정책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자체의 목적과 규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는 믿음이 있다면, 벌집 건드리기 놀이가 고통스럽지만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놀이과정에서 질문은 100년을 내다보는 큰 물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비록 우문우답(愚問愚答)이더라도

‘네 등급을 알라!’는 사회

그러나 ‘네 자신을 알라’

박종성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 아이들의 눈으로 본 현실, 어린 아이가 보기에는 죄수복이 파자마처럼 보일 수 있다.

나를 보는 나가 아닌 대상으로 알려지는 나

얼마 전 보았던 영화『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첫 장면에 John

Betjeman의 자서전 『종소리에 눈을 뜨고』의 구절인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Childhood is measured out by sounds and smells and sights, before the dark hour of reason grows(유년시절은 이성의 어두운 시간이 자라기전에 소리와 냄새 그리고 시각에 의해 평가된다)."

우리는 여기서 영화의 상세한 줄거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the dark hour of reason"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의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세계와 만나고 있는가? 영화 속에서 독일 소년 브루노는 슈무엘이라는 유대인 소년을 이성이라는 잣대로 만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 소년과 이성의 어두운 시간보다는 감성의 창문을 통해 만나고 있다.

아마도 영화 속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이성의 어두운 시간" 이란 모든 세계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개체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만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위 합리성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인류의 참혹한 사건을 만들어낸 도구적 이성으로 귀결되며 인류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양화시키려는 이성은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 본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작가는 숫자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 애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나?"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하고 소리친다.
...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학벌사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 글에서 영화, 소설 이야기가 현상적으로는 다소 주제와 벗어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와 맞물려 강력하게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수량화 문제는 '나'를 내가 주체가 되어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과 연결된다. 나의 내면이 아니라 나를 외부의 그 무엇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 점이 바로 학벌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테면 주체로서 '자아the self를 알아듣는 나the I'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알려지는 나 the me'에 무게 중심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 핵심에 있다. 학벌 사회를 조장하

고 추구하는 생활양식이 공고화된 사회에서는 대상으로 알려지는 '나'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로 이 알려지는 대상화에 '학교'가 그 자리 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대상으로 알려지는 '나 the me'로 만들기 위해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을 높이기 부단한 노력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소위 자신의 등급은 간판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간판이라는 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또한 상품이므로 자신이라는 판매 상품을 구매자인 자본가에게 잘 팔기 위해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간판의 이름을 대체하기 위해 살아간다. "박사 간판", "명문대 출신이라는 간판", "그 사람은 간판이 괜찮다"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몰아내고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유일한 가치인 상품, 화폐로 표상되는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교환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학벌이라는 것은 자신을 대표하여 내세우는 사물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물화된 현실에서 많은 이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막스가 말하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품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학벌이라는 것이 주체가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이 아니라 자신을 대상으로 드러내기 위한 외양일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상품으로 대상화된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적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학"이라는 말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인간이 갖는 고유한 질적 측면은 감각되지 않는다.

네 등급을 알라

2천 5백여 년 전, 아폴론 신전에 걸려 있는 격언인 "너 자신을 알라"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네 등급을 알라'라는 말로 변용되었다. 이를테면 매년 정부 예산 5000만원을 받아 운영하는 의 결혼 전문 사이트에서 인간의 등급 분류를 A에서H까지 구분한다고 한다. 그 중 20억 이상의 부보재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A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H등급은 부모가 농부인 직업을 부모로 두고 있는 나를 포함하여 농민을 부모로 둔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등급이다.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A등급에 속하지 않는 부모 직업의 자식들은 그와 동등한 등급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위 일류대학에 자신의 간판을 새길 수 있을 때, 자신의 가치를 20억으로 인정받아 A등급에 속하게 된다고 한다. 학벌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만들고 지탱하는 것은 학벌이라는 표상이 아니라 생산하는 이들의 삶과 사회적 실천이었다. 나아가 또한 학벌과 학벌위조의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 정치인, 관료, 대학교수 등의 예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상위등급(?) 속으로 진입하려는 것은 자신의 등급을 높이려는 의식,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등급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암묵적 경계령도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우리의 꿈과 의식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외고와 일반고, 실업고의 꿈이 다르고, 강남, 서초, 송파와 구로, 금촌, 관악의 아이들이 꾸는 꿈은 너무나 다르다. 부모의 경제력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꿈으로 투영된다. 결국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이러한 지역과 학교의 편차 속에 존재한다. 미래의 직업, 꿈, 의식을 지배하고 억압적으로

잉태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태내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화폐의 힘인 것이다. 꿈도 자유롭게 꿀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꿈은 화폐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막스의 말대로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 의식은 ‘의식된 존재’ (das bewußte Sein)인 것이다. 강남과 다른 지역의 학생들의 꿈의 차이성,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차별성이다. 사회적 차별성을 조장하는 근원적인 지반은 그들의 삶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자본주의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상상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나를 알려지는 나로 표상하기, 혹은 나를 알려지는 나로 대상화하기라는 틀을 통해 학별 사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노동 활동을 물질적 생산물로 대상화(Vergegenständlichung)하는 것과 대상화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하여 상품, 화폐, 자본의 형태로 소외되는 것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00대학이라는 ‘알려지는 나’로 대상화할 때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또한 학별 위조라는 사건 속에는 자신의 노동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학별 위조로 ‘대상화’ 된 것은 자신이 노동과 같은 실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힘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모든 다양한 질적 가치를 화폐의 가치로 교환하려는 끊임없는 욕망의 표출이 바로 학별 위조, 학별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자본가는 자신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영혼은 자본의 영혼이다. 우리의 욕망이 희망하는 영혼도 자꾸만 이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간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자본의 영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 00대학으로 표상되는 ‘나’ 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나’ 를 찾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00대학으로 대상화된 ‘나’ 는 일종의 ‘나’ 라는 실체와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상상된 나’ 이며 이러한 ‘나’ 를 사회적으로 상상한다. ‘사회적 상상’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등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이다. 즉, 일단 사회적 상상 안에 안착하게 되면, 그 상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의 토대는 생각보다 연약하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인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삶의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더 강한 것이다. 즉 사회적 에고가 내면의 에고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너 자신을 알라”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을 음미하지 않는 삶의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자신을 음미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본을 추구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인간의 소중한 가치까지 황금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 희망이 희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아를 규정하는 현실의 지반을 파괴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가치를 단일한 가치로 환원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균열 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강제된 상상적 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중충적인 관계에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배움에 심장을 들고 다닌

병가상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한 참 입시걱정에 허덕일 고등학교3학년, 병가상사 님은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떠났다.

대한민국 학생 대부분이 거치고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하 대수능)이라는 인생의 평가 잣대일 것이다. 이를 통해 얻는 ‘명문 대학’ 간판은 사회에 나가서 학연으로도 이용이 되고 노력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는 하나의 VIP 좌석표이다. 대수능은 상대적 고득점자에겐 솜사탕이 되고 상대적 저득점자에겐 독약이 되는 대한 민국 교육의 중심축이다.

나 역시도 이러한 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7월이 되기 이전에는 (이후에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랬다

면 적어도 교육의 의미가 변질된 현실에서 내가 대학을 가서 뭔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고자 하지 않음을 선언했을 것이다.) 나 또한 입시 제도의 노예였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교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친구들의 눈 밖에서 그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었다. 그땐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었다.

척박한 토양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나의 대지에서 봄바람이 살며시 불었는데 그때는 6월 24일. ‘오늘을 생략하지 않는 교육’의 언론인 김규항의 강연을 들었을 때였다. 그는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을 생략하며” 펼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하나 싶기도 했다. 강연의 제목은 “오늘을 생략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강사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강의가 계속 되어 갈 때, 문득 반(反) 교육을 교육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원론적인 논의를 해보지도 않은 채 반(反) 교육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찌푸린 얼굴을 풀고 그가 하는 말에 좀 더 몰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그는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었다. “우리 교육? 잘못 됐지.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학생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뒷바라지 때문에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대부분 유교적인 문화를 배워왔다. 그런데 효(孝)를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 고생하신 어른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세상이 불행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는 가치의 기준이 바뀌면 세상이 뒤집히게 될 거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네 인생을 살아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나에게 알아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으라는 식의 미끼를 던졌던 것 같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내 생각이 자신의 삶을 희생시켜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느끼는 걸 보면.

그래도 그건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나의 생활 태도는 여전 했고, 대다수의 학생들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똑같은 체제에서 똑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획일적인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변화의 파도가 몰아친 건 7월부터였다. 당시의 내가 가진 수동적인 모습, 즉 체제의 시녀가 되고자 했던 고3의 표준적인 거울을 깔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청소년 인권행동 아주나로(ASUNARO)를 발견하고 활동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준거집단이 생긴 것은 정말로 행운이다. 혹자는 무슨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동안의 인생의 많은 변화를 피하느냐고 그게 굳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해야 할 일이었느냐고도 묻는다.

김규항 강연에서 나에게 물음을 던진 것은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의식이 사고(思考)만으로 멈춘다면, 그는 이미 침묵의 일환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사고조차 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러한 사고조차 부족한 사회에서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것만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나로 오프라인 활동을 한 것은 사고만으로 그칠 수 있었던 나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 까지의 활동이 나의 모든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 또한 아니다. 내가 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사람 모습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과 전 보다는 나온

방향으로 가야하는 나의 모습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다. 강연도 보러 다니면서 나에게 자꾸 물음을 던지게 하고 싶었다. 토론회도 가면서 그 동안의 나의 짧았던 생각을 반성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삶을 배워가고 싶었다. 그리고 고3이 단순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주변의 눈빛도 변화시켜 주고 싶었고, 청소년이 지나면 그러한 알량한 마음도 없어질 거라는 어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고 싶었다. 그래도 체제에 속해 있음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오르고 있던 성적은 올랐던 것 보다 더 떨어져가고, 부모님과의 마찰도 심해지고, 나의 고민은 10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부모님이 나가서 혼자 살라고 말해도 “자퇴 할까?” 라던가, “수능 보지 말까?” 라던가 등 생각도 많이 해봤다. 사실 결론은 생각하지 않아도 뚜렷하게 보였다. 고민했다고 결론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었다. 수능은 봐야했고, 대학은 가야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는 미래에 활동 유예를 접수했다. 그리고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대수능은 빨리 지나갔다. 그동안 뭐했나 싶을 정도로 대수능 이후에 그 전의 했던 교과 공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12년 동안 뭐 했나 싶었다. 고3 2학기 때부터는 예체능도 다 한다는 야간자율학습도 빼면서 나는 교과 과목 이외의 것을 배우러 다녔다. 지금 까지도 배웠던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진짜 배움은 자기의 심장을 들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입시 공부는 배움이 죽어 있고, 학생의 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뛰는 심장을 들고 꿈에 한 발 다가가기를 바란다.

수능과 함께 끝난 청소년기 후기

루블릿 |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마치 꿈을 꾼 것 마냥, 어느 새 고3 끝 무렵에 서 있다. 진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거나 인생 다 살았다는 듯 허망하다든가 하는 일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따지고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른다. 산다는 게 어떤 특정한 결말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무언가에 목매여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고 또 다시 그걸 반복하고… 알고는 있지만 나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삶을 누렸던 건 아니다. 친구 녀석에게 '꽃다운 10대를 그렇게 보낼 거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숨 막히는 모범생으로 살았으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런(?) 말이지만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태껏 날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모범생'이었다. 물론 지금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압박감이랄까 그런 게 덜하긴 했지만 그렇게 지내왔고 그건 고등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범생이 랄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다가 착하기까지 한 아이로. 하지만 난 어릴 적부터 불편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걸으로 볼 때는 벌레보다 못하다는 듯 무시하다가도 '쟤 공부 잘한대.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한 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180° 달라지던 구역질나는 모습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가난하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멀리 할 땐 언제고, 다가오는 사람들 모습이 나는 보기 싫었다. 그런 탓이었을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는 나란 존재 자체도 싫어지곤 했다. 아니, 싫어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 죽고 싶었다고 해도 도무지 그래지지가 않는 걸… 죽지는 못했지만 대신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걸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내며 조용히 지내왔다. 다만 그 꼬리표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기에(일종의 권력) 중·고등학교 시절을 문제없이 잘 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난 그 청소년기라는 틀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 앞으로 살아갈 삶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치며 여기까지 어찌어찌 왔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밤이라도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혼자 아프고 마는 그런 식이랄까. 어느 게 옳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의지가 부족해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일기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수도 없이 나온다. '학교를 때려치워야 한다', '이딴 교육은 교육이 아니니 갈아엎어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수능 거부까지(이수나로를 알기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적어도 이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란 걸) 말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와 너무 딴판이고 그건 지금도 여전하다.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내가 싫고 날 믿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든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도 없이 미워하고 사람들과 거리둔 걸. 하지만 돌아갈 수 없고 설령 돌아갈 수 있더라도 돌아가고는 싶지 않다. 좋은 싫든 그건 내 인생이었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잘할 자신도 없거니와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으니까. 결정적으로, 그나마 날 좋아해주고 걱정해주고 믿어주던 사람들과 지금과 같은 관계를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지나온 삶이 상처투성이, 후회투성이라도 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게 지금이라서, 어느덧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자 아냐”¹⁾

배움을 그만두는 것 아닌 배움터 이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강연자 | 채효정, 정리 : 김현석 | 철학과 대학원생

antihakbul@gmail.com (이메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입장은 무료입니다.



▲ 이 날 강연자로 나선 <학벌 없는 사회> 채효정 활동가가 ‘학교 밖 배움터-교육적 의미와 정치사회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1) 시민 강좌의 일환으로 열린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주제의 이번 강연은 2010년 9월 10일 첫 번째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일에 3회연속으로 열렸다.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사회의 빈틈

“청소년노동자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는 유령집단인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유령집단과 같다” ‘학벌 없는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인 ‘삶은 달걀’의 총괄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번 강좌의 첫 강연자로 나선 채효정 활동가의 첫 인사였다. 그는 비록 어둡고 무겁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한 해 7만 명이 넘고 이 수치도 정부에 의해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청소년으로서 모든 인권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교육당국의 폭력적인 인식과 인밀한 대처에 문제제기

“처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제대로 된 조사연구나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지칭하는 공식용어가 ‘학업 중단자’란 이름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학업 중단자’라는 용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당국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들을 “학업중단이 아닌 학교중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이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이것이 지금은 청소년 문제이지만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많은 이들의 관심 및 지원을 호소했다.

학업이 아닌 학교를 떠난 이들, 학교 밖 배움터 필요

채효정 활동가는 학교 밖 배움에의 시작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제도 개혁’에 치중했고 너무 상상력이 빈곤했다. 현실적인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며 “이런 반성 속에서 ‘학교 밖 배움터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학교 밖 배움터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타는 불량학생도 시집을 읽고 책을 읽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고 가능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면서 “제도권 학교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만큼, 또한 학교 모델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학교 밖 배움터의 이점”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학교 밖 배움터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들

학교 밖 배움터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의) 해방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위 SKY 대학을 또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게 하고 동시에 하나의 대안문화 혹은 문화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학교 밖 배움터의 총괄 책임자로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역사적으로 ‘배움 공동체’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씨앗이 되었다.”면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학교 밖 배움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인문교육의 필요성과 많은 이들의 참여 필요

채효정 활동가는 강연을 마치며, “기술을 가진다고 꿈이 생기진 않는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또한 타인과 소통할 수 있

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문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학교 밖 배움터에 자문과 지원,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일부 참가자들,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부정이 심각”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날 강연에 참가한 학부모 강선희 씨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모임과 배움터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며 공감을 했고, 또 다른 참가자인 오상희 씨(수험생·고등학교 자퇴)는 “최근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는데 올해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싶다. 그러나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니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개인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신을 교육노동자라고 소개한 이주탁 씨(중학교 교사)는 “제도 개혁 운동과 정치 운동도 하면서 학교 밖 운동도 이루어 져야 하며 (학벌 없는 사회의 주장은)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부정이 심각하고 너무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면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경쟁과 점수, 졸업장을 다시 생각해보자”

시장과 학교 그리고 학벌의 폐해

강사 | 홍훈, 김재홍, 정리 : 김현석 | 철학과 대학원생



▲ 이 날 강연자로 나선 홍훈 교수가 ‘점수와 가격, 입시경쟁과 시장경쟁, 졸업장과 상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시장과 학교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시장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라> 두 번째 강연자인 홍훈(연세대 경제학과 ·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는 “상품생산과 학생생산이 같은 것인가, 공장과 학교가 같은 것인가 나아가 만약 상품과 교육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다”며 첫 인사와 함께 강연의 동기를 설명했다. 이 날 강연은 ‘점수와 가격, 입시경쟁과 시장 경쟁, 졸업장과 상표’이라는 주제로 기업과 학교를 비교하며 학벌문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학교에서 경쟁은 꼭 필요한가

홍훈 교수는 시장과 학교에서의 경쟁을 비교하며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공진화co-evolution) 하지만, 입시경쟁에서는 특히 특정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는데 목표를 둔 한국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나 평균적으로 임여를 증대시키거나 다른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 한다”며 시장과 교육장의 차이를 보여줬다.

동시에 한국에서의 입시경쟁은 “전체의 평균적인 수준을 증진시키지는 못 한 채 서열만을 결정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이는 학벌이라는 독점을 낳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입시경쟁의 폐해를 지적했다.

학생들의 능력을 점수로 환원할 수 있는가

그는 청중들에게 “상품이 가격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특히 학생들을 점수로 환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장도 ‘객관성’을 자부하면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인생관 등을 사장”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시 “또 우리사회만큼 학생의 점수가 중요한 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사회에 비해 우리사회는 점수가 갖는 역할이 너무 크다”며 학벌사회로 규정되는 한국사회에서의 점수, 특히 입시점수가 갖는 과정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특정 졸업장의 특권화, 정당한가

마지막으로 그는 상표와 졸업장을 비교하면서 “한국노동시장에서 특정학교의 졸업장은 상품시장에서 특정기업의 상표와 유사하다. 특정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사전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특정 회사의 상표를 달고 나온 상품들이 미리 평가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전제한 뒤, 졸업장이 상표화가 되고 서열화가 되는데 있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니 등의 회사와 하버드 같은 대학들을 예로 들며 “일반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평가와 명성이 쌓여 서열이 정해진다. 그러나 한국대학의 경우, 서열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서열변동이 없는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 특정 졸업장이 하나의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점점 동일시 되는 기업과 학교, 그러나

강연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는 “기업에서 소비자의 개입 없이 물건을 만들어 팔지만, 학교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아 한 개인이 형성될 때는 선생과 학생의 교류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업과 학교의 차이를 밝혔다. 결국 “신자유주의 하에서 학교와 기업은 보다 유사해지고 접근하고 있으나, 교육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기업과 학교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이 다름을 명확히 했다.

“서울대 다음 경북대, 그 다음이 부산대·전남대, 그 다음은?”

학벌과 국가경쟁력

강사 | 정세근, 이철호 정리 : 김현석 | 철학과 대학원생



▲ 학점, 학벌, 영어시험 점수 등이 취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1일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세 번째 강연이 열렸다.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학벌 없는 사회 간사님께서 걱정을 하시던데, 저는 1명만 있어도 같이 강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좋지요.” 이번 특강의 강사인 정세근(충북대 철학과·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교수의 인사말이다. 축제기간과 이번 특강이 겹치는 바람에 참가자들이 적은 탓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학벌로 인한 대학의 붕괴

정세근 교수는 학벌로 인해 대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붕괴되고 있다고 보았다. “철저히 서열화 된 상황에서 지방대학부터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이런 현상을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은 1등 대학도, 2등 대학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1등 대학은 독점권이 이미 획득되었으므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등 대학은 어차피 2등인데 해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은 학벌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임이 분명했다.

학벌로 인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붕괴

학벌의 문제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서울이 자꾸 비대해져 갑니다. 사교육 열풍과 전세값의 폭등의 모습들을 보면, 국가균형 발전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서울이 경쟁력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은 ‘부자-사교육-명문대’라는 우리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비유학과 이민문제도 꼬집었다. “돈이 있으면 자녀만 보내고 그 렇지 않으면 아예 보따리를 쌉니다. 학벌사회에서 더 튀기 위해서 아니면, 학벌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노동하여’ 학원비 대거나, ‘수출하여’ 유학 보내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었다.

한편 과도한 사교육비가 노년빈곤의 주원인이라는 것이 정교수의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년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것은 다시 저출산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도 결국 교육문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들이 결국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정교수의 진단이다.

기업과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기업에서 아직까지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만큼은 빼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학생의 능력보다는 그 학맥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그는 정연주 전 KBS사장이 시도했던 채용과정을 그 대안으로 내놓았다. “KBS에서 지방대 할당제, 블라인드 면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5년동안의 입사기록을 보니, 이른바 SKY출신은 29%밖에 없었고, 가장 많은 입사자를 배출한 대학도 서울대가 아니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의 주장이 공허한 주장이 아님을 KBS가 증명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국립대무상평준화와 사립대의 점진적 준국립화를 들었다. “대학이 간판화되는 현실, 이것은 허위의식의 표본이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정점에 학벌이 있습니다” 결국 학벌 타파 없이 고교와 대학의 정상화가 있을 수 없고, 공교육 정상화 없이 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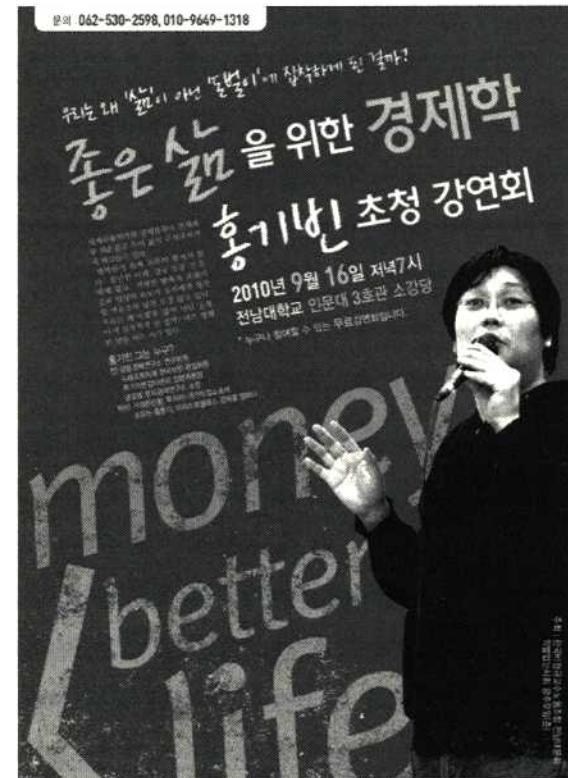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먼저 우리안의 적과 싸워야

그는 강연을 말미에 “사실 예전부터 10개 국립대 안에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를테면, 서울대 다음에 경북대, 그 다음이 부산대·전남대, 그 다음은…? 이런식으로 내부의 적들과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며 학벌 문제 해결의 시작은 결국 우리 안에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그의 현실진단은 정확했다.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¹⁾

강연자 | 홍기빈 정리 및 윤문 : 오창환 | 철학과 대학원생



1) 이 글은 2010년 9월 16일 저녁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과 <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 분회> 공동주최로 전남대 인문대 소강당에서 열린 홍기빈 강의를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윤문한 것이다. 두 시간 남짓 진행된 이 강연에서 오간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진 못했다.

부(富, Wealth)에 대한 칼 마르크스의 정의

오늘 강의는 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요강Grundrisse』에서 따온 말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인용문은 거의 십여 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것으로 최근 300년 동안의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 책에서 따온 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부란 제한적인 부르주아적 형상을 벗겨버리고 나면, 전면적인 교환을 통해 창출되는 개인들의 필요욕구와 잠재적 재능, 오락, 생산력 등등,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보편성 이외에 또 무엇이겠는가?²⁾)

노동자들이 더 높은 만족, 심지어 문화적인 만족까지 누리는 것,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일, 신문을 정기구독하는 일, 강의를 듣는 일,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 취미를 계발하는 일 등, 즉 그 자신을 노예와 구별해 줄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일……³⁾)

여기서 마르크스는 진정한 부富의 의미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혼용할 수 없을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릴 적 그 낱말을 처음 들었을 적부터 저에게 '부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를 내가 내 뜻대로 쓸

2) Karl Marx, *Grundrisse*, trans. by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1993), 488쪽.

3) 같은 책, 287쪽.

수 있는 내 밖에 있는 물질의 총량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부'가 나라는 개인의 존재와는 떨어져 있는 어떤 한 묶음의 무엇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 말은 저의 고정관념을 확 깨는 말이었던 겁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부가 사람 밖에 있는 부의 총량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능력의 총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신의 능력이 얼마만큼 계발되어 있고 얼마만큼 풍부하게 자기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의 능력의 총량으로서 부를 정의하는 관점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학의 전제와 완전히 어긋난 말입니다.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부Wealth를 '내가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나 바깥에 있는 대상, 또는 재화. 혹은 나 바깥에 있는 것의 총량'으로 정의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들은 사람 자체의 능력을 논외로 칩니다. 사람이 가진 내적 능력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걸 생각하지 않았고 도리어 대부분이 그런 것을 비학문적인 태도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마르크스의 혜안과 상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 노벨상을 탔었던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가 'Human Development'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부의 척도는 GDP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만큼 계발되어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얘기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160여 년 전에 영국에 체류 중이던 어느 독일 망명객 하나가 자기 노트에 이런 생각을 기적였다는 것은 참 믿기 힘든 일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늘어놓는 말들을 전부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만 마르크스의 저 인용문만큼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챙겨 가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르크스의 저 명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란 무엇인가, 또 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까지 너도 나도 경제를 외칩니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불어나서 가히 ‘국민적 학술열풍’이라 할 만큼 경제 관련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조금만 따져보면 우리가 ‘경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적고 ‘경제’라는 것이 의외로 모호한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들 경제, 경제 외치는데 경제란 무엇입니까? 이 물음 앞에서 다들 당황해합니다. 제가 괜히 학자 흉내 내려고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정의내리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경제經濟’의 낱말풀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민經濟民’이라고 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번역한 것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맥락과는 거리가 있으니 차라리 ‘Economy’ 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시다.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입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쓸 때 거기 담긴 의미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제를 뒤의 것, 돈벌이 경제의 맥락에서 정의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정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고 주어진 수단은 희소하므로 인간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

서 선택을 잘 하는 것이 경제다.’ 그런데 저 두 가지 경제 개념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다릅니다. 이건 명확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왜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앞의 것을 ‘살림살이 경제’라, 뒤의 것을 ‘돈벌이 경제’라 부르기로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경제oikos를 정의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경제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형·무형의 수단을 조달하기 위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는 살림살이 경제를 정식화한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얘기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정의는 영국 경제학자 라이오넬 로빈스L. Robbins가 1930년대에 쓴 글에서 최초로 정식화한 것인데, 이는 돈벌이 경제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목적들과 상이한 수단을 비교하고 계산해야 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돈(교환가치)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이 문제는 돈을 얼마만큼 적게 쓰고 많이 남겼느냐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두 정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움직이면 돈이다’란 말을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돈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돈이 매순간 필수적이라는 것, 즉 살림살이를 위해 돈벌이가 필수적임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림살이경제와 돈벌이경제를 구분하는 일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전면화되기 이전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저 둘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칠팔십 년대만 하더라도 이 둘이 선명히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옛날 표현 중에 “돈 사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농경사회였고, 그래서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급자족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뭐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든지 할 때, 즉 애들에게 돈을 주거나 뭔가를 사줘야 할 특별한 경우에 시골 어르신들은 내다 팔 물건을 들고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벼는 건데, 옛날 어른들은 이걸 가리켜 ‘돈 사려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돈을 다른 여러 가지 재화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사고 방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를 가리켜 어려운 말로는 ‘실체경제substance economy’이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를 손수 또는 마을사람들과 힘을 합쳐 해결하고, 정 안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만 장터에 가서 사왔습니다. 평소엔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돈이 생기면 돈을 꼬깃꼬깃 접어 집안 장롱 밑에 처박아두었습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돈벌이와 살림살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돈벌이에 매진하던 이들은 상인이라든가 귀족 등과 같은 특수한 계층에 제한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인류역사에서 돈벌이와 살림살이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약 300년 전 등장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둘의 경계가 희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돈벌이 경제의 가치평가 방식

매우 인상적인 일이어서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TV 뉴스에서 한 기자가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중국산 굴비가 영광굴비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굴비가 맛과 모양이 영광굴비랑 거의 차이가 없어 전문가조차 식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런 일이 두 번 있기도 힘든데, 그 날 저녁을 먹으려 식당에 갔는데, 그 때 TV에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 브랜드 명품백으로 둔갑한 가짜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백이 소재나 형태 재봉 등 모든 면에서 정품과 거의 차이가 없어 전문가조차 식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냐? 전문가조차 식별하기 힘들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똑같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평가valuation’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랜드를 진짜라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모조품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벌이 경제의 전형적인 가치평가방식입니다. 정품과 모조품 사이의 질적 차이가 없다면 (혹은 이를 도외시하고 말한다면) 상품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물건의 소용(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건의 용도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명품이나 브랜드를 소비할 까닭은 없습니다. 물론 명품, 브랜드 등을 보는 다른 접근법도 있고, 우리가 머리로는 물건의 용도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살림살이 경제의 문제를 끊임없이 돈벌이 경제로 바꿔놓으려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살림살이경제를 부정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그런데 돈벌이경제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돈벌이경제의 제일의 기초는 바로 희소성scarcity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희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순 사기입니다. 단언하건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몸에서 어떻게 무한한 욕망이 솟아난단 말입니까.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 끼.” 오늘 저녁에 5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나, 라면으로 때우나 어찌됐든 그저 한 끼 식사일 뿐이란 겁니다. 스테이크 먹고 좋아봤자 그 포만감(물리적인, 또는 심리적인 만족감)은 채 두 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희소하다는 생각, 이건 15세기 이전까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화가 희소하다는 생각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나 토마스 홉스T. Hobbes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대신 서양인들은 우주의 충만함plenum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주 속에 결코 무(진공)는 없으며 우주 전체는 존재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를 지시하는 관용구가 이를테면 great chain of being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주자연 속에 없는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대상세계가 유한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도 유한합니다. 즉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문화의 산물이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모두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욕망의 충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충족이 문제라 하더라도 더

나은 상태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욕망, 혹시 여기서 무한한 욕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 이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은 더 이상 경제의 영역이 아니며 이는 문화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마샬 샐린스Marshall Sahlins의 『석기시대 경제학 Stone Age Economics』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원시인들의 경제생활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부족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영양만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노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의 노동량은 고작 하루 세 시간 정도에요. 제대로 갖추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도 이들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관에 비춰보면 부가 아니지만 이들의 관점에선 부유한 삶인 것이죠.

경제학자 칼 맹거Carl Menger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질적인 욕망은 즉자적으로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욕망은 무한합니다. 물리적 생존과 관련된 극소수의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간 욕망은 내면 상태mental state로부터 생겨납니다. 부처님도 말했듯이, 인간의 내면은 우주를 감쌀만한 큅니다. 그리고 욕망은 인간의 내면성mentality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무한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 물어봅시다.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품)를 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욕망과 관련이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그것을 살까요? 우리는 별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말하길, “인간의 자연적 욕망은 지극히 적은데, 문명 상태에서는 허영이 욕망을 커다랗게 만든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셈 옆에 있는 떡갈나무 하나만 있

으면 됩니다. 단지 나무 한그루의 자연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다

이렇듯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다르죠 무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단지 맞바꿀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기회입니다. 돈이 많으면 삶의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에 대한 욕망은 삶, 곧 인생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Wille zur Macht’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권력Macht’이 주어지는 겁니다. Macht는 mächtigen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조동사예요. Macht와 mächtigen은 영어에서의 might와 may의 관계와 유사하죠. 곧 권력이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돈에의 무한한 욕망 또는 ‘권력에의 의지’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지평(곧 미래의 삶)에서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에 대한 욕망은 물질적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추상적 욕망은 물질에 대한 구체적 욕망과 다릅니다. 이 사실은 인간 욕망의 필연성에서 돈벌이의 필연성을 연역하는 일이, 또 이로부터 돈벌이 경제만을 절대적 진리로 옹립하는 일이 거짓임을 드러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인간 신체와 연관된 필연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일은 쉬워요. 술을 잔뜩 먹고 오바이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침에 먹었던 김치찌개의 성분들과 밤에 다시 만나 일일이 눈인사하면서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비루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경제에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욕망을 돈이라는 추상적, 형이상학적 주문mantra으로 뒤바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경제를 자꾸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법: 욕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

사람이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 이건 돈벌이 경제와 살림살이 경제 중 어디에 속할까요? 이건 살림살이 경제의 영역입니다. 이건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앎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늙은 다음에 만날 친구도 있어야 하고, 생각해보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들이 바로 이 살림살이의 문제가 돈벌이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양 사람을 헛갈리게 합니다. 이처럼 돈의 세계는 거의 파우스트의 세계,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세계이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돈벌이 경제에선 삶의 구체적인 기획에 대한 고민이 끼어들 틈이 없고 오로지 내가 가진 돈을 늘리는 것만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자기 삶과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는 그 돈으로 충족시킬 자기의 진짜 욕망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살게 뺀합니다. 이처럼 살림살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부유해지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욕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라고 권합니다. 부유해지려면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예 돈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악물고 돈만 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트폴리오를 그

림으로써 우리의 욕망이 저 양극단 사이 어디쯤 위치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부는 사람 자신의 역량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 과정에서 얼마나 풍부한 사람이 되었는가, 살림살이 경제는 바로 이것을 부의 중요한 척도로 여깁니다. $M = M'$ 이것은 고리대금을 통한 부의 창출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M = C = M'$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부의 창출을 나타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공식입니다. $H = M = H'$ (이 공식들에서 M 은 돈money, C 는 상품commodity, H 는 사람human을 뜻합니다) 처음 언급했던 마르크스의 인용구절을 다시 곱씹어봅시다. 앞선 두 공식의 부와 달리 셋째 공식에서는 부가 사람의 역량의 증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 계발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때론 가벼운 깃털처럼!

느루 | 잡다한 활동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늘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보는 내내 먹먹해지곤 한다. '블러디 선데이'가 그랬고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그랬다. 영화 속에 나오는 과거의 시공간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꿈틀거리고 있어 더 울림이 큰 영화들이다.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영국의 아일랜드 억압상황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소국에 대한 악탈과 침략상황으로 생생하게 전이되곤 한다. 자유와 평등의 씨를 말리고 있는 제국주의의 수명은 이토록 질기고도 모질다.

여기, 두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경쾌하고 독특한 아일랜드 영화가 있다. 제목부터 산뜻한 느낌을 풍기는 '플루토에서 아침을'. 깊고 푸른 눈매를 가진 아일랜드 배우 '킬리언 머피'가 주연을 맡아 화사한 여장연기의 절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니 '보리밭에서 흔드는 바람'에서도 그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아일랜드의 독립을 꿈꾸는 투사로 분한 그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다양한 주제를 절묘하게 배치하고 곳곳에 경쾌한 유머를 맛깔스럽게 버무려놓고, 심각한 정치적 배경을 가볍게(?) 스케치하듯 그려낸다.

아이리쉬(아일랜드인을 이렇게 부른다)에다가, 아버지가 신부인 관계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상황, 게다가 성소수자라니. 가난과 차별을 등에 업고 살아가야 하는 주인공의 처지가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녀는 늘 자유로운 영혼으로 가벼운 깃털처럼 세상에 스며든다.

학교 선생에게 끌려가고, 테러리스트로 몰려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도 키튼은 늘 무한한 긍정과 낙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장미와 캔디 그리고 미니스커트, 모피, 스타킹, 샤넬 No.7… 키튼이 사랑하는 것들은 그의 취향을 단박에 보여준다. 그의 본명은 패트릭이지만 그는 키튼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한다. 그는 갓난아기 때 성당 앞에 버려졌고, 성인이 된 후 엄마를 찾아 고난의 런던행을 택한다. 런던에서의 여정은 스포일러니 생략.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정치적 격변기를 전면에 깔고 있진 않지만 외려 그렇게 무심한 듯 연출이 아일랜드의 현실을 절감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늘 초연한 듯 주인공 키튼의 모습은 오랫동안 피로 얼룩진 아일랜드에서 터득한 삶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심각' 함을 버리고 때론 가벼워지라고 얘기하는 그이지만 그도 정치적 질곡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순 없다. 순진무구했던 그의 친구가 폭탄에 목숨을 잃고, 그 또한 테러용의자로 몰려 고문과 감금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직업이 직업인지라, 성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내심 궁금했는데, 정작 영화 속에서는 성 소수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아일랜드의 정치적 억압상황이 더 눈에 들어온다. 물론 종종 등장하는 변태라는 말속엔 그가 성 소수자로서 험난한 삶을 살 거라는 걸 예고해주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는 여기저기서 치이고, 종종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곤 한다. 그는 폭탄 테러가 일어난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가는 급박한 와중에서도 스타킹에 난 구멍을 걱정하며 자신의 취향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키튼의 성적 지향이 명확히 들어나진 않는다.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 1)드랙퀸인지

1) 남녀 동성애자들이 이성 복장을 입고, 일종의 유희를 벌일 때 자주 쓰는 용어

모호하다. 뭐, 동성애자면 어떻고 양성애자면 또 어떤가? 편견의 시선을 거두는 게 중요하거늘.

영화는 이 세상의 억압과 차별의 질서를 은근슬쩍 담아낸다.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무겁게 건드리진 않지만, 묵직한 주제의식은 숨길 수 없다.

때론 키치적 감성이 묻어나고, 때론 평화감수성을 폴폴 일깨우고, 때론 돈독한 유대감이 무엇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이 영화, 썩 괜찮다. 참, 이 영화의 또 다른 즐거움, 음악의 향연은 직접 보시면서 느껴보시라.

얼마전 신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실렸다. 트랜스젠더로서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내려논 10대의 이야기였다.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소수자 안의 소수자'로 꼽힌다고 한다. 공동체가 이미 형성된 동성애자 그룹과 달리 트랜스 젠더는 파악되는 숫자도 적고 조직화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집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내몰린 10대 트랜스젠더는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

몇 년 사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란 드라마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희비극을 보면 판단착오였음을 깨달았다. 지하에서 암중모색을(?) 하고 있던 일군의 무리들이 이 때다 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늘 낯선 존재로 이성애자의 시선을 비껴가야 하는 그들. 드라마와 달리 현실속의 그이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견고한 이성애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서 성소수자들은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건,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사회의 편견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이젠 한국사회에서도 그늘 밖으로 나와 경쾌하게 활보하는 쿼어를 보고 싶다. 가벼운 깃털 같은 '키튼'처럼.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학생 0.1%와 교사 70%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들 떠들며 종례시간 30분이상"

"이젠 교사 왕따"… 학생 '짱'들 빼풀어진 영웅심

또 학생이 교사 폭행…미번엔 수원서

또또또… 학생이 교사폭행, 주위 학생 아무도 안 말려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마무 것도 할 수 없어 교사를 눈물

학생간 폭행은 '퇴학', 학생이 교사 때리면 '쉬쉬'?

미회창 "학생의 교권유린 심각, 체벌 다시 도입해야"

초등학생이 할머니뻘 교사폭행 '충격'

▲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을 보도하는 최근 신문기사 헤드라인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산수를 잘 못하던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는 몇 명쯤 될까? 찾아보니 대략 사십만명 정도 된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대략 오백만명 정도 된다. 더 자세한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매년 변하고 있는 수치니까 이 정도를 잡고 얘기를 해보자.

'교시를 폭행할 수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시를 폭행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교사가 학생을 모욕했거나 학생에게 폭력을 쓴 경우부터 그냥 순전히 학생 본인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던 경우에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극소수일 것은 확실하다. 만약에 그 비율을 0.1%, 그러니까 $1/1000$ 이라고 해보면 어떨까? $5,000,000 \times 0.1\% = 5,000$. 즉 5,000명의 학생들이 교시를 폭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만약 0.01%라고 하면 어떨까? 약 500명의 학생들이 교시를 폭행할 수 있다는 가정이 된다. 0.1%면 5,000명, 0.01%면 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교시를 폭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만약에, 최근 언론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보도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은 그 0.01% 혹은 0.1%의 일부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0.1%라거나 0.01%라는 수치는 결코 큰 수치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99.9% 그렇다."라고 말할 때, 이 99.9%는 심리적으로는 100%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어떤 집단의 0.1%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문제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0.1%를 가지고서 그 집단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낙인찍거나 호들갑을 떨면서 체제의 위기를 예언하는 것은 오류이고 과장이다. 지금 몇몇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학생이 교시를 폭행한 사례를 찾아서 보도하며 교육의 위기를 부르짖고 "요즘 학생들"의 무서움을 설파하는 모습에서 나는 딱 그런 모습을 본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체 초중고 학생들의 0.01%만 교시를 폭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는 약 500명이 된다. 물론 학생이 교시를 폭행하는 사례가 1년에 500건씩이나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확률을 가정해본 것뿐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 몇몇 언

론들이 하는 것처럼 몇 년 전 몇 달 전 사건들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찾아다닌다면, 거의 1년 내내 그런 보도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뿐이다.

자, 그럼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어떨까?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와 참교육연구소에서 전국 교사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약 70%가 체벌을 한다고 응답했다.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20%의 교사들은 체벌을 ‘자주’ 한다. 전체 교사 집단에 이 비율을 적용해보자. $400,000 \times 70\% = 280,000$. $400,000 \times 20\% = 80,000$. 이십팔만명의 교사가 체벌을 하고 팔만명의 교사가 ‘자주’ 체벌을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칙이나 한계 없이 ‘자유롭게’ 체벌한다고 답한 교사도 3.8%나 되니까, 이 역시 1만명은 넘는다.

제다가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사 1명은 학생 수십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학생 1명이 교사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폭력의 영향력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체벌금지 이후’에도 여전히 체벌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추적하기보다는 굳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들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언론은 얼마나 공정한 것일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센세이션 하지 못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황색 언론의 논리이다.

나는 학생인권운동을 하면서 지난 몇 년 간 교사가 학생의 뺨이나 머리를 때린 사건, 체벌 중에 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사건 등 수십건의 ‘선정적인’

체벌 사례들을 접해왔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사정이나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전혀 공론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반을 넘는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맞는 것은 잘 문제가 되지도 않고 교사 집단 전체를 낙인찍을 이유도 되지 않고 교사들의 인권을 부정할 이유도 되지 않지만, 어쩌다가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고 학생 집단 전체를 욕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부정할 이유가 되는 세상. 그 모습이 이미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교사들에게 폭력을 쓰는, 폭력과 폭력이 맞부딪치는 교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학부모이든 누구든,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것은 예컨대 범죄자에 대한 경찰력 행사처럼 엄격한 요건 속에 예외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별개로, 일방적으로 선정적인 사례들만을 부각시키며 어떤 사람들을 문제집단으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지금처럼 선정적 사건들을 캐내서 계속 뿐 려대기만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은, 불공정하며 무책임하다. 그 언론들은 정작 그런 식의 부풀리기 보도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혹시 그 몇몇 언론들의 보도 추세야말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꺾어놓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닌가?

‘학교 폭괴’ 를 직시하라

나도 한국의 학교 교육이 붕괴해가고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요즘 애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봐서’ 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더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 학교가 부여하는 과업과 수행하는 교육 활동에 냉소적이거나 불참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현상에 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육이 노골적으로 계급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학교에 차별과 억압이 심할 때, 학교 교육과 사회 현실이 학생들에게 삶에 관한 희망을 주지 못할 때, 학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학교 수업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주지 못하고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때 — 이럴 때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이유를 잃고 학교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미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이야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학교 붕괴’ 담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입시경쟁, 취업경쟁의 모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는 ‘학교 붕괴’ 현상을 확산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승자독식’의 원리가 드세하고 학교는 입사취업기관 혹은 졸업장 발급 기관이 된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열의를 갖고 따르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나 또한,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부동산 투기나 해라.”라고 대놓고 말하고 학생들은 성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붕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뭔지, 여기에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입시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평준화라거나 복지정책 및 경제정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커다란 것들이 얹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교육이나 탈학교론, 공교육 재편론 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 또한 ‘학교 붕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교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 학생인권 보장이야말로 학교가 가기 싫고 믿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자발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바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 아닐까? 누구든 진정으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우려한다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화월주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의미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설상숙 | 교육문화공동체결, 지역교육네트워크화월주 사무국장



▲ 회정초, 주월초, 광주서초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타악 퍼포먼스팀이 북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지역교육네트워크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 까지 가정과 마을이 함께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는 개념을 가

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정의 부모님에게 유고가 발생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마을 어른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유지 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 하다. 현대적 개념의 행정구역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우 과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아침에 가정에서 눈을 떠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방과후학습을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학원을 들렸다 집으로 돌아간다. 하루동안 아이는 여러 장소를 거치게 되고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되지만 매우 분절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방식의 만남은 아이가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간의 단절 및 생활과의 단절을 가져오며, 아이를 돌보는 일 또한 단절적 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어른들 중 누구도 아이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 문제는 학교를 넘어서, 교사 및 강사를 넘어서, 부모의 그늘을 넘어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마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현대의 행정구역 단위에서는 교육을 논할 만한 공적 영역이 형성 되어 있지를 않다. 그래서 인위적인 조직으로서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지역교육네트워크는 마을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이다.

화월주

함께 아이를 키우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의 목표이다. 화월주는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 교육, 사회복지 등의 각 영역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주체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한 것이다. 학교는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유연하게 만들고 구체적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적 협력 단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문화적 체험과 실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상호배려와 자아 존중감, 지역의 소속감을 경험하고, 다양한 성취경로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 삶과 사회에 대한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인 비전을 갖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지역아동 센터는 만성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지역을 통해 해소 받고 싶어 했으며, 전문적인 교사와 강사를 필요로 했다. 또한, 문화·청소년 단체들은 아이들을 향한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섬세한 만남을 필요로 했다.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각자의 문제의식을 가진 학교, 지역아동센터, 문화단체,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화월주는 만들어졌다.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는 사업이 아닌,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운동이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각 영역을 넘어서는 공적 의사 소통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각 기관은 서로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듯 보이나, 각각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소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구조 확보가 필요하다. 각 영역을 대변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채널로서의 운영위원회와 각 기관의 실무자와 사회복지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공동사례관리회의는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과 돌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는 지역과 연대하여 아

이들의 다양한 성향 및 재능에 적합한 살아있는 교육을 향한 목적의식 및 교육방식을 갖추고 지역아동센터 역시 돌봄의 아동청소년 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문화예술교육 또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해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 교육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즐거운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적 마을 공동체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간 깊은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면 네트워크 활동의 자발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 각 주체가 즐거운 네트워크가 되는 일, 서로의 교육적 꿈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 마을의 상호 신뢰 회복 되도록 하며 교육적 연대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열린 마을 프로젝트, 마을 축제, 마을 운동회, 마을신문등 다양한 방면을 활용해야 한다.

전망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는 교육적 마을공동체 회복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한아이가 나고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까지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의 하루와 일생에 함께 하고, 돌보고, 기다려 주고 필요 한 순간순간마다 교육적 기능 및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의 또 하나의 역할은 지역에 근거한 지역 자원의 집적과 재분배를 통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서로 학습하며, 서로 돌보고, 서로의 꿈을 찾아주고, 서로가 꿈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꿈은 꾸고 있는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존댓말로 읽는 헌법 – 개헌

차진태 | 법대생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네요. 이 글을 읽으실 분들께는 이미 ‘작년’이 되었겠지만. 미리(?)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글을 쓰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시즌인지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탄생기념일’이지요. 하지만 사실 예수는 ‘탄생’ 보다는 ‘죽음’ 때문에 훨씬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 교리를 차치하고서라도, 예수의 죽음의 특이성은, 무엇보다 ‘특이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뇌하고 힘겨워하며 그 ‘쓴 잔’을 마시는 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흔히 다른 종교의 위인이나 철학자들과 비교가 되고는 하지요. 석가모니는 ‘3개월 뒤에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는 제자들에게 그 기간 안에 궁금한 것들을 모두 질문하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 날 밤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죽음의 가치(어둠의 세계—몸에서의 해방)를 연설하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을 꾸짖고는 침착하게 독배를 마십니다. 이들에 비해, 공포와 두려움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예수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볼게요. 도대체 예수는 왜 죽은 것일까요? 존 헤이글의 <고통과 악>에 등장하는 남미의 신학자 마테오스(Juan Mateos)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가 죽은 것은 당시 정치적, 종교적인 구조 속에 있었던 탐욕과 통제하고자 하는 지배욕과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을 악마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 헤이글은 이에 대하여,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의 악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아름답게 치장되고 합법적으로 위장된 악인데, 예수는 이러한 악을 위선이라고 꼬집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권력자들의 신경을 건드린 죄. 그것이 심지어 사형을 선고한 총독 빌라도마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서 손을 씻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죄 없이 살해당한’ 예수의 죄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지배욕과 명예욕에 대항한 죄.

예수는 그런 죄로 죽어간 수많은 역사 속의 의인들과 약자들의 편에 자신이 서 있다고,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초탈한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과는 달리 그렇게 예수는 고통 속에 죽습니다.

잠시 시선을 신문지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된 철거민 9명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모르나, 면서 혹시 화를 내셨나요? 혁.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있기 일주일 전, ‘용산참사’를 빚은 용산 4구역 재개발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어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재개발은 워낙에 막대한 이윤이 걸려 있는 탓에, 관련 규정들이 대개 (여기

면 바로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들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을 읊겨보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신축 주택가구 수도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고 “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 234명 중 149명은 서면으로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는데 “이 서면은 관리처분 계획안에 관한 결의서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으며, 변경된 관리계획 내용 또한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택비율이 건물 평형에 따라 불균형” 하므로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법률해석의 오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제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고등법원의 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용산참사’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만일 ‘용산참사’ 지역의 재개발이 ‘무효’라고 확정될 경우 2009년을 뜨겁게 달군 최대의 ‘비극’은 ‘Black Comedy’로 부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불법 징회’의 문제로, 혹은 ‘위법한 공무집행’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웬지 ‘예수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무효인 재개발계획에 근거한 무효인 강제집행. 그리고 이에 반대한 시위대와 이를 진압한 경찰의 충돌. 인명의 희생—하자있는 재개발 추진에 담긴 어떤 집단적 탐욕. 이에 대한 저항을 범치 이데올로기 확립 용도로 ‘활용’ 하려는 어떤 지배욕. 이 기회가 ‘승진’의 기회가 될 어떤 이들의 명예욕.

탐욕과 지배욕과 명예욕의 향연!

한국 현대사에서 그것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실 ‘용산 참사’ 정도는 2009년 정도 되니까 ‘참사’ 소리를 듣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국무총리 사과까지도) 9차례나 개정되는 동안 합헌적인 개헌은 단 두 번뿐이었던 한국 헌정사에는 그러한 욕망들의 ‘향연’과, 그에 대항한 수많은 ‘예수들’의 죽음이 몇 줄 안 되는 글과 60여 년 밖에 안 되는 역사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참이던 당시 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은 당시 헌법에 따른 대통령 간선제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밀어 붙였고, 수개월 간의 공포 정치 끝에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에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에서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여,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킵니다. 결국 재선된 이승만은 1954년의 2차 개헌을 통해 3선에 도전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이승만 3선 개헌’이었지요.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에 1표가 모자라(135명 찬성) 부결 선포되었으나, 그 뒤에 ‘재적의원 203인 중 2/3는 135.333…이어서 사사오입하면 135명’이라는 이유로 번복되어 속칭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부패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결국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은 하야하고 의원내각제를 담은 3차 개헌이 되면서 윤보선-장면 민주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4.19 혁명 당시 군중들을 살상했던 자들을 처벌할 소급입법 근거규정 제정을 위해 4차 개헌이 이뤄졌지만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헌법안을 의결, 공고 후 1962년 5차 개헌을 하여 민주정부의 짙을 자릅니다. 5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과 정당정치가 강화되면서 쿠데타의 중핵 김종필은 공화당 안에서 세력을 키우며 차기 집권을 노렸지만, '68혁명'으로 옆 나라 일본까지 시끄러웠던 69년, 6차 개헌으로 박정희 3선 개헌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72년 7차 개헌(유신)을 단행한 박정희는 결국 79년 10. 26으로 사망하고, 권력공백기를 이용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80년 5월 비상 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등을 골자로 5.17 쿠데타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개헌안 확정과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간선제 및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8차 개헌을 이루지만,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의 현행 헌법(9차 개헌)이 쟁취됩니다.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개헌'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약 1년 전쯤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덕분에 2011년 상반기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개헌'과 '한미FTA'와 '아시안컵'(!)의 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조연으로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연평도 포격과 대북 강경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포폰'이나 '천안함', '4대강', '청목회', '예산 날치기', 'UAE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파워'는 뭐랄까... 그저 지나가는 한 '사건'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경지에 이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도저로구나!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정국 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일본식 정부주도 자본주의를 배워왔다지만, 차기 자민당 유력 주자들은 한국에서 좀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핵으로 하는 현행 헌법 상의 권력구조가 책임정치의 구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매우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 자서전 1>에 따르면 87년 6월 항쟁 후 개헌에 관한 여야 논의 중 김영삼-김대중 등 민주진영은 대통령-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지만 그럴 경우 단일민주진영이 선거에 나오면 팔찌할 것으로 예상한 여당에서 극렬히 반대해서 현행의 대통령 5년 단임제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김대중 자서전 2>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재직 중이던 2007년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책임정치 확립 등의 '이론'적인 면에 비해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주장이 더욱 절박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관심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체감지수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헌정사상의 개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 개헌과 그렇지 않은 개헌. 곧, 일반 국민이 원해서 이루어진 개헌(3차, 4차, 9차)과 독재자와 그 추종 세력이 원해서 이루어진 개헌(1차, 2차, 5차, 6차, 7차, 8차).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다수가 원한 민주적 개헌과 국민을 지배하려는 일부 소수 세력의 힘에 의한 개헌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제안은 상당히 뜬금없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2010년 말 현재, 일반 국민은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책임제 등 권력구조의 개헌이라는 주제보다는 무상급식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의 문제 또는 다가올 아시안컵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나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에서의 박찬호-이승엽의 활약 등의 문제

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 현정사는 이 땅에서 국민의 관심 밖에서 일어난 개헌은 모두 결정적으로 국민을 탄압한 세력에 힘을 실어준 개헌이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오 장관의 개헌 제안은 너무나 ‘현실적’ 인 제안으로 들립니다. 물론 87년 개헌 이후 20년도 더 지났고 그 사이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두 번이나 일어났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재도약하자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87년 개헌의 정신을 본받아 여야합의를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야4당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야 할 것인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여당은 야당과의 공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0년 말의 추세가 2011년 상반기에 이어진다면 ‘한미FTA’ 또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야합의가 그야말로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할 ‘개헌’ 논의는 진행시키기가 정말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으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제안한 것은 학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그만큼 지원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점과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지원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특임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인만큼) 따라서 2011년 상반기에는 느닷 없이 TV에서 개헌론과 관련된 얘기들이 자주 방송(온갖 법대 교수들의 등장!)되면서 국민들의 없는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등 – 분명히 국세로는 하지 않겠다던 ‘4대강’ 을 어느새 완전히 세금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 개헌을 줄기차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면 적

어도 ‘이재오 총리’ (또는 오세훈, 김문수)가 남아서 친이명박대통령계열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생존 및 장기 집권 유지 전략으로 ‘개헌’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 씁쓸합니다.

탐욕과 지배욕과 명예욕.

2000년 전 예수는 이것들에 대항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욕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는 예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든, 심지어 예수를 모르든, 아마도 ‘예수와 닮은 삶’ 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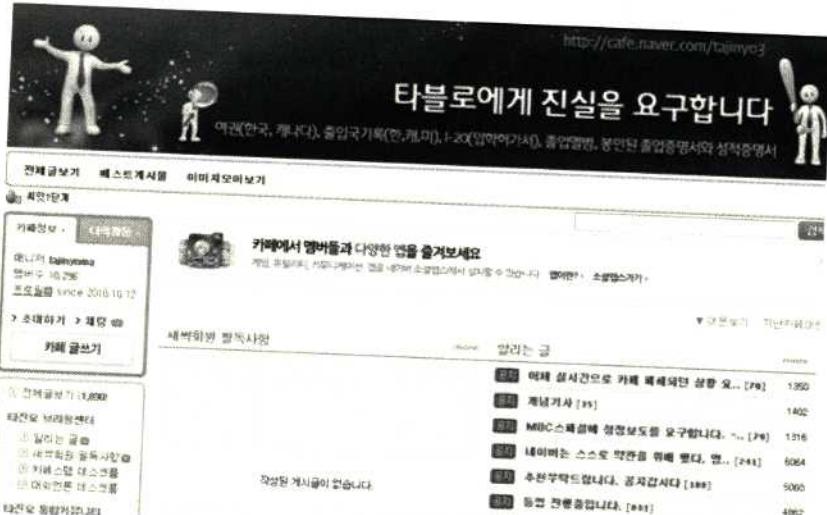
그래서, 쓸 줄 모르는 글이지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이렇게 글로나마 저의 9년 지기 박형준과 학별 없는 사회 광주모임(준)을 응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길. 그리고, 탐욕과 지배욕과 명예욕을 악마라고 부를 줄 아는 용기를 우리 모두 갖게 되길 바라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대신한 졸저 한 편을 보냅니다. 조금의 미안함과 함께.

2010년 성탄을 이틀 앞둔 날. 夜雨.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정민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 20만명에 달하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사이트

인터넷은 어떤 매체보다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의 유통수준은 가히 경이롭다 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 표현이 때로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 범주에 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표현의 분출구로 삼는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와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권력에 대항하는 생각, 의견, 주장을 외부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제 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며 별명을 붙이거나 풍자하는 것이 인격권의 침해라면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위험이 따른다. 사적인 개인의 명예가 저질스럽고 거짓된 정보로 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인격권은 상대의 표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대상과 사안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해석될 수 있다. 공인과 사인, 공적인 사안과 사적인 사안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경우 표현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사인의 사적 사안의 경우 프라이버시권, 인격권과 충돌할 위험성이 크기에 보다 좁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타블로의 경우 어디에 해당할까? 연예인은 대중적 영향이 크고 스스로 신상정보를 열어놓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개인보다 크기에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타블로가 학력 마케팅으로 대중적 관심

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블로의 학력 문제는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블로의 학력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 이거나 중대하게 끼치는 공공의 해악은 없기에 공인의 사적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공인이라 할지라도 정치인, 공직자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연예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수위는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 합니다(타진요)' 회원들의 행동을 마치 의혹 제기의 중심인 운영자 '왓비컴즈'의 추종자, 사이비종교와 같은 이치로 보는 여론이 있다. '타진요' 회원들의 행동을 개인들의 정신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꽤 넓고 다양하게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학력의혹 시작의 이면 '학벌주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십거리가 떠돌고 있다. 그 중 특정 가십거리는 의혹으로 키워지고 확대되는데 왜 하필 타블로의 학력논란이 가십거리에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확대되었을까? 타블로 학력의혹 제기가 단순 가십거리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의 이면에는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타진요 회원들은 '스탠포드 석사를 3년 반 만에 마친 사람이 한국에서 힙합 가수를 하겠느냐? '스탠포드를 졸업할 만큼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스탠포드를 석사까지 3년 반 만에 마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학력 콤플렉스가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보여주며 학력에 대한 편견은 학력의혹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타블로 학력의혹 제기는 정당한가?

경찰의 조사 결과 타블로의 학력은 진실로 밝혀졌다. 만약 조사 결과 타블로의 학력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타블로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학력의혹은 정당화되고 '타진요' 회원들은 영웅이 되었을지 모른다. '진실성'은 정당성에 상당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진실성이 이전의 모든 행위나 표현들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의견개진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 의혹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단순 비난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타블로의 언행이 많은 이들의 학력조작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면 학력의혹을 제기 한 것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추적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발적 감시사회

의혹제기 과정에서 사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는 타블로의 가족의 신상 털기는 가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연결된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부터 음모설과 여러 가지 의혹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의견 개진, 집단적 추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상의 집단적 추적활동은 상당한 근거

와 정보를 가지고 국가권력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매개로 정의감을 불태워 집단적 추적을 통해 개인을 심판하는 기혹한 처벌이 일어나기도 한다.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은 비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퍼트리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한다. 문제는 추적과정에서 까발려진 개인정보가 인터넷의 정보보존력과 전파력과 더해 지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한 핵심은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이버에서 뭉친 개인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개인을 사찰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와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에 의한 감시사회가 일반화 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무차별적인 감시를 불러올 것이다.

4) 공권력에 대한 불신

'타진요' 회원들이 큰 비난을 받고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광기어린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독재정권 아래에서 경찰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고 2008년 촛불 이후 인터넷에서 공권력에 의한 탄압 사례들이 쏟아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타블로의 학력조작 의혹이 공권력이 밝힌 사실에 끝까지 대항할 만큼 사회

적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 우리는 진실탐구의 가치를 생각해봐야 한다. 타블로의 학력논란 사건에서 남는 것은 타블로 개인의 괴로움밖에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 마녀사냥, 악플에 '인터넷실명제' 가 답인가?

학력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타블로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MBC 스페셜에서 타블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바타가 된 기분이다"라고 표현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왜 악플이 난무하는 것일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느슨하고 밀착력이 없다. 특히 연예인은 수많은 악플의 대상이 되는데 그들은 삶의 오락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인물로 현실적으로 와 닳지 않는 대상이 된다.

인터넷 악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으켰던 개똥녀 사건, 최진실 사건, 타블로 학력논란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핵심적 이유는 범죄예방과 본인이 추적가능하다는 의식으로 네티즌들의 책임감을 불러일으켜 악플이 제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최진실 사건' '타블로 사건' 등은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현재 일일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에서는 글을 쓸 때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방지와 범죄예방은 이미 그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현재 사실상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털 등에서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악플이 줄었다고 할 만한 근거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

예방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타블로 사건의 경우에도 타진요의 운영자 '왓비컴즈'는 실제 명의 도용을 해서 활동을 해왔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의 제한으로 의견개진에 위축효과만 낳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오는 필수 요소이다. 익명이기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온라인에 털어놓기도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나 국가가 강제해서 시행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국가의 강제 하에 모든 글에 신원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글이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은 실질적 내용규제가 되며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의사표현에 위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와 인권교육, 자발적인 네티즌 운동!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람을 모욕했을 때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모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권력층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오남용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가 부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한다면 인터넷 악플 방지의 대안은 무엇일까?

법적 제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최소한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일간지나 방송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하고 있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중재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벌중심 체제를 넣었고 이는 타블로 사건의 숨은 원흉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 과목은 인권적 감수성을 키우거나 사회구성원들을 깊고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시험지 답안을 맞추기 위해 배우는 과목 중 하나, 또는 입시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하는 방법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 악플 문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플 방지 운동'을 해나간다면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그만 변화가 이룬 커다란 결실

하정호 | 교육공간 오름 대표

1980년대,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나던 뉴욕 시에서 지하철과 차량 6000대에 그려져 있던 낙서를 지우는 일을 5년에 걸쳐 진행하자, 점차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져 결국 지하철 중범죄 사건이 75%나 줄어들었다 합니다. 흔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사례입니다. ‘교육공간 오름(이하 오름)’은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700만원의 시설지원금으로 이와 같은 결실을 맺어 소개하려 합니다.

오름은 재작년(2009년 봄)에 개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작은 배움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대여섯 명의 학생들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극단의 연극인, 학원 강사들이 함께 의지를 모아 도심 속에 조그만 학교를 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오전 9시에 모여 철학고전을 강독하고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의 수업을 하며, 오후 3시 이후에는 체육이나 전시관 관람, 여행, 봉사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학생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 기관도 그러하듯이 오름이 지나온 시간도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학교를 열었을 때, 수업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별 말도 없는 학생도 있었고,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는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오름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서운했습니다. 학생들과 광주 인근을 둘러보며 학생

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할 때, “만약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수업이 끝나도 여기에 남고 싶겠어요?”라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 우선 학생들에게는 남아서 하고 싶은,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대학도, 공부도 포기한 학생이 좁은 공간에 앉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놀고 싶을 만큼 서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오름은 자기 방보다도 편하지 않고, 삭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오름에 정을 붙이고 오름을 좋아하기 전에는 어떤 교육도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을 붙이게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연극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던 로비를, 카페테리아로 바꾸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삭막한 학교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로비에 의자도 두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틀기도 하며 웃고 얘기하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교육청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줘 여름 방학에 로비의 벽을 허문 후 싱크대와 조리 시설을 갖추고 카페테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시설 개조 전



로비의 벽을 허무는 교사와 학생들



개조 후의 카페테리아 모습



카페테리아 옆의 서가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다들 카페테리어 주위에 앉아 점심식사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며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교무실로 쓰던 공간에 선생님들의 책상을 모두 빼고 자유롭게 쉴 수 있게 매트를 깔아 주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누워 있지는 않았습니다.

카페테리어 시설 개조가 끼친 긍정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만일 카페테리어가 없었다면 오름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점심마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맛이 있든 없든, 정성이 들었던 아니든 함께 밥을 먹으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서로가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교훈이 분명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믿고 기다리면 그들은 스스로 변모하며 제 삶의 길을 찾아갑니다. 학생들에게는 부모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고민을 나눌 친구들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다르듯, 교사와 친구의 역할도 다릅니다. 때로는 교사들에게 서운하거나 말 못할 자신들만의 문제를 학생들은 스스로 얘기하며 풀어가고, 스스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터울 없이 만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했던 많은 얘기들을,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들 소중한 벗이었음을 이제는 잘 알 것입니다.

교사들과 학교 선배에게 상처 입어 학교를 그만 둔 후 오름으로 와, 한여름에도 매트를 뒤집어쓰고 옥상을 배회하던 두 학생은, 올 겨울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서로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가 그들의 벗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라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다른 두 학생도 수능시험을 보고 정시에 합격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실용음악학원과 대안학교를 보내주지 않아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한 학생은, 올 여름 무용학원을 다니며 뒤늦게 자기의 꿈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을 씻어내고 홀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학원수강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자습을 빼주지 않는다 해 학교를 그만 둔 한 학생은 올해 대학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뜻도 있고 해서 수차례 대학에 가기를 권해 보았지만 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다는 편안만 들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1인시위에도 제일 열심히 참여했고, 지금도 근로정 신대 할머니들을 돋고 있는 그 학생이 다른 누구보다 건실하게 살아갈 것임은 결코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전시회를 둘러보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만 했던 그 시간도 각자에게는 ‘자기’로 충만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둘러앉아 함께 마주 볼 수 있는 밥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밥상이 없었으면, 각자의 ‘자기’도 있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한국의 젊은이에게 삼성의 의미를 묻는다.¹⁾

지훈 | 철학과 대학원생



▲ 교정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대학생들. 이들은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지쳐 있다.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면,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삼성 문제를 푸는 것은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를 보다 낫게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1.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20대인 그녀는, 내가 대학생이랍시고 게으르게 뒹굴 대며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 반도체를 검사하기 위해 끝없이 제품을 납에 넣었다 빼며 제 자신을 죽여야 했다. 처음 직장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가 가졌을 꿈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져 나도 모르게 흐느끼게 된다. 고된 노동에도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을 테지만,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만

1) “삼성은 ‘대학생의 친구’인가 ‘욕망의 친구’인가?” (프레시안, 교육생각 통권2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이다.

할 때, 지나가버린 그 시간을 얼마나 안타깝게 그리워했을지.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제야 비로소 마음 아파했던 것이다. 왜 좀 더 일찍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바빴던 것일까. 그녀가 일깨워준 고통은 그러나 내가 겪은 것은 아니다. 고통은 우리를 개인으로 만든다. 나의 고통이 아닌 한 그것은 늘 멀리 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참여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나의 껍질을 깨고 너의 자리에 나를 놓을 수 있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 상상력을 근절해왔던가. 얼마나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도록 길들여져 있는가.

그것은 멀리 볼 일도 없이, 우리가 거쳐 온 그 힘겨운 입시경쟁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느 학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선 서로 공책을 빌려주지 않아요. 힘들게 필기 해놓고 남을 보여주면 자기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오로지 타인과의 적대적인 경쟁만이 있는 곳에는 서로에 대한 참된 공감이 설자리가 없다. 거기에서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처럼 한 명이라도 더 밟고 일어서야 하는 야수적 경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대가 생겨날 틈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절망하며 자신에 대한 존중과 긍지를 빅탈당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키워진 그 적대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으니, 한국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사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볼 일이다. 행여 자신의 곁에 있는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해 지지는 않았는지.

입시 경쟁을 벗어난 대학의 캠퍼스는 다소 평화로워 보였고 작은 활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활기란 질푸른 빛을 띠고 있기 보다는 다소 우중충한 느낌이다. 그것은 들어갈 구멍 없이 촘촘한 이 사회에 어떻게든 끼어들고자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몸부림이기 때문에 또한 지쳐있다. 사회는 이것을 “자기계발”이라고 부른다. 자기계발에 힘을 쏟으면 쓸을수록 삶이 충만해지기 보다는 채울 수 없는 공백만 늘어나는 느낌이 밀려들지만 물러설 수도 멈출 수도 없다. 사회는 자기계발을 훌륭히 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자기계발을 하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낙오된 사람들의 고통은 정당화된다. 저들은 계으른 자들이다! 모든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개인에게 돌려진다. 그리고 극소수의 예로 존재하는,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눈물겹게 말하면서 이것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잔말 말고 노력하라!!”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란 어쩔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질서의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저들은 왜 자기 잘못이나 무능력함은 생각지도 않고 늘 사회 탓만 하는가. 이제 사람들은 저들이 못되게 투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단지 착하고 순하게 사회의 동정만을 기다리기를 요구한다. 저들은 그저 불쌍해야 만 한다. 이 과도한 손가락질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잊으려는, 내가 행여나 밟고 있을지도 모르는 타인의 행복에 대해 잊으려는 강박증을 발견한다.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밖을 향한다. 이러한 자기위안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분노하지도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지도 못한다. 이것을 내면화한 것이 우리 시대이며, 오늘날 청년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우며 살았다.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가지만, 눈 돌릴 틈이 없다. 공부해야 되니까, 자기계발해야 되니까, 내 살 길 바쁘니 슬퍼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던 것이다. 루소는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은 그 불행이 크고 작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행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베푸는 감정에 비례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고통에 대한 공감은 자기에게 가까울수록 커진다. 지구 한편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겪고 있는 어떤 이의 고통보다 곁에 있는 친구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한 그보다는 나의 작은 상처가 더 아프게 다가온다. 그리하여 고통은 우리를 개인으로 만든다. 자신이 고통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망에 몰입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의식은 그 욕망에 대한 반성을 무력화시킨다.

물론 우리는 아프다. 우리 20대는, 아직 철들기 전 IMF를 겪으며 그늘진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것의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체화하며 자랐고, 대학에 들어오자 1년에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마주하면서 얼른 취직해서 갚지 않으면 안 될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으려하자 비정규직 800만 청년실업 100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우리 20대는, 그리하여 악착같이 사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20대는 아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픈 20대도 있다. 많은 이들이 대학을 다니며 취업 걱정도 하겠지만 또한 청춘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발길을 돌려 공장에 들어가야 했던 20대. “고등학교 때까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생사를 넘나드는 병에 걸렸다는 게 꿈만 같았”라는 故 박지연

씨(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1987~2010).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께 효도해 보고자 대학도 포기하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3년도 안되어 저에게 돌아온 결과는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떠난 사람. 삼성이 선전하는 기계화된 신라인 만 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람이 직접 하기 위험해서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라인 설비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구라인에서, 약품이 그대로 손에 스며드는 면장갑을 끼고 10년이 넘은 노후한 X-Ray설비와 제품을 담그면 하얀 연기가 나는 납과 싸워야 했던 짚음.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결국 건강을 잃고 병을 얻었지만 산업재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삼성의 경영철학 앞에 힘없이 죽어가야 했던 생명. 이렇게 아픈 20대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 자기를 알리지 않았을 뿐 대학생들이 대기업 사무직 일자리 줄어들었다고 투덜대거나 혹은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 때, 공장에서 일터에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짚음이 있다.

이 아픔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물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도록 쉼 없이 몰아세우는 사회를 탓할 수 있다. 또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나도 힘들다면 자기에게만 몰입하는 사람들의 불타는 출세욕을 한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은 모든 것을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만일 누군가 쌀을 앞에 두고 거기에 깃든 농부의 땀과 대지의 정성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낯설어 할 것인가. 우리에게 쌀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내고 교환해야 할 물품으로서만 다가올 뿐이거늘. 자본은 내가 마주한 대상에 들어있을 누군가의 노동과 땀 혹은 고통을 당연한 것

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회가 당연한 질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곁에 있는 타인의 고통은 안개처럼 멀어진다.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탁에 따뜻한 밥이 올려져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밥을 위해 새벽 같이 일어나야 했던 사람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지저분한 학교의 쓰레기통이 다음날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한, 휴지가 풀어헤쳐져 엉망이 된 학교의 화장실이 기적처럼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한, 그것을 청소해야만 했던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자본은 너를 향한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저어함 없이 욕망에 몰입할 수 있다. 그리고 욕망은 점점 획일화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욕망은 이제 자본과 결탁해야만 이뤄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욕망이 객관화된 것이 돈으로서, 이제 돈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욕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몇 년 전 “한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PD수첩의 설문조사에서 성인남녀의 60%정도가 돈이라고 대답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욕망이 돈으로 수렴된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러한 욕망의 뒤안길에 용산참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삼성을 비롯한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개별국가의 주권이 오히려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되는 FTA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국가는 자본의 권력에 점점 더 예속되어 간다. 그러나 막연히 자본이라고 밟해서도 곤란하다. 자본은 그 자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 기업을 통해 활동하는 바, 다시 말해 자본이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기업이다. 이제 모든 것은 기업화되도록 강요받는데 오늘날 국립대 법인

화 논의는 그 한 예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가는 기업의 후견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한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기업은 삼성이다. 모든 권력은 불균등하게 집중된 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삼성재벌은 5대 재벌 일반 자산의 50% 가 넘는 막대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여러 재벌 중의 하나의 재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최근의 선거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유행처럼 트위터에 투표하는 모습을 담은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이 교양인임을, 곧 개념있는 젊은이임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선출되는 권력을 뒤에서 움직이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당장의 욕망 때문에 환경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일관된 흐름인데, 4대강 사업 또한 지난 정부 시절 새만금 사업의 연장일 뿐이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 뒤에 자본이 있기 때문이며 그 자본의 정점엔 삼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 곧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인 자본에 저항하지 않는 한 끝끝내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지 못한다.

한편에서 누군가는 우리 안의 속물성을 말하며 이명박씨의 대통령 당선이 갖는 의미를 엇나간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단순히 ‘이명박’을 경제동물로 화한 우리의 속물성에 대응하는 기호로만 보면 곤란하다. 장로인 그에게서 우리는 종교와 자본의 행복한 결합을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는 이 시대의 절대화된 자본을 가리킨다.

‘자본’은 신이 되고, ‘돈’은 이 사회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다. 이명박은 어차피 조금 뒤면 물러날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도리어 그의 대통령 당선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은 자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삼성에 저항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옥죄고 있는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수렴시켜 노예화하는 자본의 운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자기에게만 몰입했던 눈을 들어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인간 선언이다.

사회는 우리가 함께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한다. 나의 꿈이 너의 꿈 속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 나의 고통과 너의 고통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분노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누군가의 꿈을 밟아야만 성립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서만 보증되는 것이라면, 자본이 강요하는 사회가 그러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그것이 당연한 질서로서 강요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저항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긴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꿈을 잃어본 세대이지 않은가. 그 아픔을 알지 않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 오르던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대학 이름으로 굳어지고 또 한낱 기업 이름으로 퇴색되는 것을 우리는 겪지 않았던가. 이는 지금 우리가 함께 앓고 있는 병이니, 이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힘쓰자.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더불어 꿈꾸는 법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는 꿈을 잃어버리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자. 삼성에 저항한다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2.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한다. 자본은 사람들이 점점 더 헐값에 노동을 팔도록 강요하지만 공적인 안전망이 전혀 없이 오로지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을 잃고 자기계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건 자신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20대는 더욱더 정치에서 눈을 돌렸다. 또한 이미 대학의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것을 유의미하게 표현할 장소는 다른 곳에 충분히 있기도 하거니와, 어차피 학생회는 학교정책에 일정한 결정권을 갖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은 누가 학생회를 구성하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굳이 학생회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진 학생들은 한 번 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자기에게 충실히 하더라도 한국처럼 획일화된 사회에서 욕망은 그저 향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낙오에 대한 공포가 함께 있다. 공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 나의 밖으로부터 덮쳐오는 것이지만 언제나 내면적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한편에서는 욕망을 또 한편에서는 공포를 내면화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나의 사회적 용도를 내가 보여야만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더 우리를 짓누른다. 최근의 ‘김예슬 선언’은 여기에 저항하는 선언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대학을 거부한 학생이 있었고 아예 수능거부를 한 학생도 있었지만 이와 달리 김예슬 선언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것이 명문대가 아니라 지방대에서의 일이었고 소수 고등학생들의 운동이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사회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형태가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에 저항해야 하고 삼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의 일터가 되기도 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삶의 하나의 지평이 된 기업 시스템을 보다 낫게 바꾸어나가는 운동이기도 하다. 오늘날 경영학교에서는 기업의 존재이유가 ‘주주이익의 극대화’라고 명시하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이익을 내고 먹고 튀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서, 그 아래에서 인간은 쓰다 버릴 부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할 수 있는가. 김용철 변호사 초청 강연을 하려 했지만 대학에서 강의실 대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고, 법관이 옷을 벗으면 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출세라는 농담이 나도는 법조계에서는 서로 삼성의 사랑을 받으려하며, 언론인 설문조사에서 74.5%가 ‘삼성에 관한 기사가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꿔줄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우리의 시민적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효과적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삼성 불매이다. 소비가 자본이 자기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고리인 한에서 이것을 멈추는 것은 경제를 민주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은 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삼성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 도서관 전산실에 들렀는데 내 앞에는 삼성 컴퓨터가 놓여 있다. 책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삼성 에어콘의 눈에 띈다. 어떤 학생은 삼성 MP3 플레이어를 귀에 꽂은 채 강의실로 들어오고, 어떤 학생은 삼성 휴대폰에 전화가 와서 강의실을 나가며, 어떤 학생은 삼성 노트북에 강의노트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이 없는 곳이 없다. 새삼 느낀 것이지만, 나는 삼성에 둘러싸여 있었다. 거기에는 나와 같은 20대의 어느 노동자의 손에서 나온 반도체가 들어있을 테지만, 학교에서는 공공물품을 거의 삼성 제품으로 구매하고, 학생들은 서비스 좋다는 삼성을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있었다.

삼성의 제품만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기업들이 학생들의 동아리나 모임 활동을 지원하곤 하는데, 너무나 프랜들리한 삼성은 그 지원에서 가장 앞서가며, 나아가 지원을 넘어 동아리를 대체하는 경지로 나아간다. 누추하게 잔디밭에 둘러 모여 기타치고 노래 부르기보다는 폼나게 해외 배낭 여행을 떠나길 원하는 대학생들은 기업이 지원하는 모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영삼성(youngsamsung)을 운영하여 대학 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언제나 욕망과 친구한다. 그리하여 삼성은 대학생들의 친구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다. 자세한 뒷사정은 알지 못하나, 작년엔 학생회와 삼성이 손을 잡으려한 일이 있었는데, 한총련의 후신이라 할 서울 지역 ‘한대련’과 삼성의 합작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광고지면을 내주고 지원을 받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삼성 올앳카드 회원을 학생회가 대신 모집해주고 카드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는 형태의 사업으로, 의결이 끝나고 집행을 기다리다가 몇몇 대학의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듣지는 못했다. 욕망을 가진 누구라도 친하게 지내는 삼성은 이정도로 대학생들의 친구이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온 우리는 그래서 삼성을 멀리하지 못한다.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세상과 이어주고 더위도 식혀주며 음악도 들려주고 여행도 시켜준다. 얼마나 고마운가. 삼성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다니.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들에게 삼성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짹사랑은 상처를 남긴다. 조금 서글퍼지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삼성은 학벌을 중시한다는 것. 얼마 전에 언론에서 삼성 사장단의 학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호들갑을 떨며 삼성 임원의 꿈을 심어주기도 했는데, 대개의 기업들이 서울대 인맥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이는 특이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른 곳에 있다.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로비/섭외 실력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로비/섭외는 서울대 인맥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하면 그게 아니다. 뻔히 알고 있는 자기 동창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로비하는 것은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리어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 큰 돈을 챙겨주는 것이 로비에서는 훨씬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런 까닭에 계열사 임원 중에는 비서울대출신이 많을 수 있지만, 권력의 정점인 구조본은 모두 소위 명문대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아무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직원이 된다면 다행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역시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누군가는 자랑스럽게 올렸을지도 모르나 그저 황당함과 경악만을 안겨주었던 동영상에서 본 매스게임을 실제로 하려 동료들과 집결해야 한다. 물론 멋진 콘도에서 삼성은 돈의 힘을 보여줄 것이고, 임원이 방문해서 삼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심어줄 것이다. 멋진 일 아닌가. 내가 삼성맨이라니. 그러나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미가 계속되리라는 희망은 지속되기 힘들다. 이직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삼성에서의 재직 기간은 보통 7~8년이라고 하는데, 3~4년차 사원들이 이직률은 30%대나 된다고 한다.

삼성을 발판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려는 것일 텐데, 삼성에 계속 충성하다간 너무 일찍 묘비를 세워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을지 모른다. 물론 잘 견뎌낼 수도 있다. 경쟁과 성과주의는 한국에서 익숙한

것이지 않은가. 삼성 안에서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촛불 집회로 뜨겁던 당시 삼성에 취직한 어느 친구의 말로는 그 이후 인터넷 포털 DAUM을 접속하는 것도 무척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예가 아닌 한, 무작정 견디는 것은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인간은 의미를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막연히 공정하며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함석헌은 사람의 사람된 점은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즉 “사람은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줄을 아는 것 이요,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줄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만 하며,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도약한다.

사람들은 삼성의 세련된 사무실에서 잘나가는 현대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이미 인천 송도만 하수처리 시설 사업권을 차지한 ‘삼성 배울리아 인천환경주식회사’에 취직해서 물 사유화 사업에 앞장설 수도 있다. 또는 삼성생명에 취직해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민간 의료)보험”, 즉 지금의 건강보험을 통째로 사적 의료보험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뛰어들 수도 있다. 또는 삼성캐피탈에 취직해서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고객 도장을 몰래 만들어 불법 대환 대출을 할 수도 있다.(걱정 마시라. 금융감독원은 알고서도 처벌 하는 등 미는 등 했으니.) 혹은 운이 좋은 사람은, 분식 회계 장부가 법원에 넘어가면 서류를 빼돌린 다음 어두운 밤 해운대 백사장에서 불태워버리는 낭만을 즐길 수도 있고,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토탈(주)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했을 때처럼 공정위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가로채 도망가면서 찢어버리는 액션을 즐겨볼 수도 있으며, 더

운이 좋아 압수수색과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검찰이 주는 충분한 시간동안 내부자료와 파일을 파기하는 스릴을 맛보는 기회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너무 걱정 마시라. 저런 일들은 가벼운 과태료만 내고 끝났으니.) 더 화끈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민일 사무직 노동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조립라인 노동자나 반도체 노동자가 처해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동을 개선하려 노조라도 만들라치면,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끌어 물을 수 있다”는 영화 같은 대사를 내뱉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활극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런 일로 삼성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면, 지뢰 제거 활동 홍보처럼 ‘글로벌 사회 공헌’ 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다. 물론 뒤에서는 삼성이 F15-K 전투기를 수출하고 공격형 아파치 헬기를 만들고 있겠지만, 어차피 이미지는 이미지니까. 어렵게 이런 일을 몸소 하지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구경할 기회는 얻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짜릿함을 느끼기에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이상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에 나오는 일들이다. 더 많은 일들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보시기를.)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두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삼성이 보여주는 기술의 눈부심이다. 영화 아바타에 세계가 열광한 것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때문이겠거니와, 삼성이 생산해내는 최첨단의 반도체와 LED TV, 휴대폰 등을 우리를 매혹시키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거두어보자. 빛에 빼앗겨버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그것이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더 크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

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 컴퓨터나 노트북 센스에는 백혈병으로 숨져간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눈물이 스며있고, 손 닦는 수건도 없는 화장실에 그나마 맘대로 가지도 못하고 두 시간에 10분씩 쉬는 시간 외에는 꼼짝 없이 컨베이어 벨트에 묶여 있어야 하는(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122쪽) 생산직 노동자의 한숨이 녹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유일무이한 권력이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만일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교양을 원한다면, 투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제품의 월등함 때문도 노동자들 임금 때문도 아닌 임원들 보너스 때문에 비싼 삼성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자. 자본의 전지구적 생산 속에서 ‘국산’이라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은 삼성을 응원하는 게 애국이라는식의 허위 선전에 고개를 끄덕일 때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업에 국가 시스템이 종속되어 최소한의 정의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와 그 속에서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이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거부, 삼성 불매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집약된 그 곳은, 정의를 위한 발걸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옥죄어 노예로 만드는 권력에 저항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이 시대에 새롭게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삼성 센스 노트북을 샀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거대담론을 자주 말하는 그는 이러한 불매운동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사소한 문제인가? 아니다. 여기 사회의 모순이 있다. 여기 눈물이 있다. 여기 피맺힌 울음이 있고, 여기 한숨과 아우성이 있다. 자, 그러니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것이 교양이다.

현병철 자진 사퇴해야

박고형준 | 학별없는사회 광주모임 상임활동가

지난해 말도 많았던 G20정상회의로 인한 불시 검문검색·교통통제·그물망 경비, 사전검열 등 인권침해·유린이 빈번했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자기역할은 더욱 절실한 때였다. 그러나 현재 인권위는 국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해결에 앞서, 인권위 조직내부 인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유인 즉,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재와 노골적인 정권 코드 맞추기가 위험수위를 넘어 결국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한데 이어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도 자리를 던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이명박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석인 상임위원직 중 자리에 뉴라이트 홍진표, 김영혜 씨를 내정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은 현병철 위원장의 자질이 문제다. 인권단체의 우려와 취임 반대 속에서 정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현 위원장은 임기 동안 국가보안법 옹호 발언, 국가인권위 독립성 해손 발언, 내부 민주적 운영 해손 등 문제를 일삼았다. 급기야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을 남기며 용산참사 재판부 의견 제출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의 날치기 폐회를 선언하고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야간 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의견 제출을 모두 부결 처리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봐도 인권에 대한 개념 없음’을 드러내는 용감·무식한 행위이다.

2010년 학별없는사회 광주모임에서는 30건이 넘는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

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제고사, 그린마일리제(상벌점제) 등 민감한 시안은 침묵하거나 정책과로 이관시켜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진정은 1년이 넘었지만 부족한 조사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직 축소가 낳은 결과이며, 독립성을 잃어버린 허물만 있는 인권위 현재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현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 되레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권위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진정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 축소 이후 진정건수가 많아지면 인권위 조사관들은 힘들게 일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그것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어떻게 진정이 많은 게 현병철의 성과가 되는가. 그만큼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는 징조임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이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

최근 현 인권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정당·621개 시민사회단체·법학자·법조계·여성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현재의 인권위 위기 상황을 만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위 점거농성, 매일 저녁 촛불시위를 하며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인권위가 있었기에 한국사회와의 인권상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다. 힘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 숨죽여 울어야 했던 사람들이 달려가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인권보장의 통로이기도 했다.

앞으로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보장은 물론, 올해로 10주년 맞는 인권위의 자기반성의 해가 되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법적대응은

‘적반하장’이며, ‘표현의 자유억압’

연합뉴스 송기자는 전교조에 대한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2010년 11월 19일, 연합뉴스 광주전남본부 송 기자는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정책실장을 상대로 각자 5천만원 금원을 제공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기자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난 10월 11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발표한 ‘의뢰자와 질문내용 공개 못하는 이상한 외고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논평이다. 소송을 제기한 송 기자는 이 논평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송 기자의 이번 법적소송은 ‘적반하장’이다.

송 기자의 소송은 누가보더라도 그 도가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육청 각종위원회 참가한 것은 물론, 외고심의과정에서 보인태도 등은 언론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외고지정 문제가 광주교육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었던 만큼, 설령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이며 소속위원회 참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신중히 보도했어야 했다. 특히, 타 언론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삼고 있었던 만큼 전교조의 논평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시민단체를 위협하

는 것은 본인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공익적 언론비판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송 기자의 이번 법적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민단체는 정부가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비판과 견제할 역할도 있다. 이번 소송은 언론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한 감시활동을 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를 다했는지 돌아 볼 것을 권고한다. 우리 학벌 없는 사회 광주 준비위는 소송을 취하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합뉴스 광주전남 취재본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집회-법적투쟁, 연합뉴스 보도요청 거부 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다. 끝.

2010. 11. 26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장휘국 교육감은 '경쟁교육 반대'에 대한 소신을 지키고 일제고사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

일제고사 자율적실시에 따른 과행사례 유감, 11년도 일제고사 예산 전액삭감을 통한 일제고사 완전폐지하길 바라며



▲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이 2010년 7월 치러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전국 6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오늘 예정된 중학교 1,2학년 대상 일제고사를 강제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일제고사 자율적 시행방침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한 상태로서,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사를 밝힌바 있다. “전국단

위 학력평가(일제고사)는 학생간, 학교간 성적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본래의 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 2011년부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일제고사 인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제고사 자율적실시 따른 파행사례, 사립학교장들이 단합하여 일제고사 강행,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장휘국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폐지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자율적 시행’ 이란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일선학교의 파행이 일어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 ▲ 일제고사 찬/반 여론을 두고 교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된 학교 ▲ 대체 프로그램이거나 정규수업이나 교과운영 방침을 두고 갈피를 못 잡는 학교 ▲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 일제고사에 동의한 학생만 모여 시험 치루는 학교 ▲ 특히 대다수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원성이 많다’는 빌미로 학교장들이 단압하였고, 사립학교 26개 중 절반이 넘은 16개가 일제고사를 강행하였다. 만약 서울, 경기, 전남교육청처럼 일제고사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이런 ‘따로국밥식 일제고사’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장휘국 교육감의 ‘무소신’이 ‘자기무덤’을 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나몰라식 일제고사 지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며 혼란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각급학교 파행 사례에 귀 기울려야 한다.

2. 16개 사립학교와 10개 공립학교들의 이번 일제고사 강행 목적을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16개 시,도간 학력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했으나 이제 6개 교육청과 전국의 50% 이상의 학생이 응시하지 않게 되

어 시,도간 학력격차를 확인하는 것도 무산되었다.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도 이듬해 2월에 통지되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도가 전무하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들은 이번 시험을 학교 간 서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교장들의 불안은 고스란히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투영되어, 목적도 불분명한 이번 시험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선택권’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불용’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인지하고, 교육주체들이 평가로 시달리지 않게끔 일제고사 완전폐지를 위해 온갖 힘 써주길 바란다.

3. 우리 시민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간 단지 선언적인 반대에 머물지 않고 중단 없이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을 전개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제고사 폐지, 경쟁교육 반대 등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휘국 교육감이 당선이 되어 2011년부터는 일제고사 폐지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올해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2011년도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하단 참고자료)을 살펴보면, 버젓이 일제고사 예산을 올해수준으로 동결 편성해놓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인 진보교육감에 걸 맞는 언행일치를 보여주길 촉구하며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안 전액 삭감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0년 12월 21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자율 뺏긴 강제학습노동,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보충수업 전면 금지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광주J고등학교 난간에서 한 재학생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중고생의 38.5%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18.9%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 원인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성적비관이라면 학생들을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이 정상이 아닌 것이다. 수도 없이 바뀌는 교육 관료들의 쉽게 내던지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실행할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장희국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학 전 선행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은 매우 비교육적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조하며 각급 학교별로 ‘방학 중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시교육청의 의지 있는 모습에 대해선 환영한다.

하지만 방학 중 교육활동이 온전히 학생들의 ‘희망자(자율적) 선택’으로 시행된 적 있는가. 고등학교에서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우열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방과후학교의 경우,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보충수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두는 교육당국의 서열화 정책과 수년간

방치해온 시교육청의 관행 때문이다.

최근 우리단체로 살레시오고등학교 한 재학생이 제보를 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충수업에 대한 사전 학생동의 없이, 교과목을 선택 ② 교과목 폐기지로 보충수업을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 ③ 성적에 의한 심화반(우열반)을 편성하여 보충수업을 진행 ④ 자율학습희망조사에서 ‘비(非)희망’한 학생들을 일선교사가 억지로 참여시키는 등 ‘방학 중 교과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들에게 너무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단체는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에게 강제학습노동이 더 이상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이 ‘전면금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끝을 모르는 경쟁교육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불행히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학교 내 강제학습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시교육청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앵무새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시교육청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진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감의 결단’이다.

2011년 1월 12일

학별없는사회 광주모임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와 여러 교육사화시민청소년단체들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시행령 개악을 공식화하고 강행하는 교과부의 뻔뻔한 작태에 대해 우리는 차마 공식적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오늘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① 학교장의 학칙 제정 등 권한 강화 ② 학칙준수 서약식 실시 ③ 출석정지 도입 ④ 이른바 ‘간접체벌’ 허용 등이다. 이미 예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언급했었지만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지적해보고자 한다.

하나,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전면 부여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본래 인권의 제한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을 연상시키는, 학교의 시계를 무려 40년은 거꾸로 돌리려는 만행이다.

학칙은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고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과 한계 속에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장의 독재적 학교 운영이 어떻게 학교 구성원들을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고 있지 않은가? UN아동권리 협약 또한 제28조에서 학교 규칙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운영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조차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를 당당하게 내놓을 셈인가?

하나,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과 징계 수위의 강화는 학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 밀보인 학생들이나 ‘찍힌’ 학생들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계속 줘서 밖으로 돌리고, 강제로 전학을 보내거나 가벼운 시안만으로 퇴학을 시키는 등 징계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징계 받은 일수가 출석일수로 계산되지 않는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유급’ 혹은 ‘퇴학’ 시킬 방법만 제공하는 꼴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도가 있음에도 새삼스레 시행령에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 제도가 교사나 학교에게 밀보인 학생들을 격리하고 낙인 찍는 데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교장이 자

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게 한 내용과 함께 생각해보면 그런 위험은 더더욱 높아진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징계가 학생들의 회복과 복귀, 지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문제 학생들’을 낙인 찍고 배제하는 데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징계 제도가 과연 교육적인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또한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 인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혁하는 일이다. 징계의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더욱 강하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출석정지 제도 등의 징계가 학교의 보복 수단이나 학생 배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고양 하겠다는 발상은 역시 학교를 독재구역으로 만들려는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준법 의식’은 그 법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민주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입학식에서 학칙 준수 서약식을 하라는 것은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전원에게 이미 존재하는 학칙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서약하라고 강요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학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칙 준수 서약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칙의 제정이다. 학교장이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게 해놓고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의 논리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학생생활과 밀접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또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분명 교과부가 학생자치활동에 비로소 관심을 기울이고 학칙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에는 정작 그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의 독립적 권한 보장과 학교 운영 참여 보장은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나 절차 또한 학교별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형식적인 의견 반영, 학생을 들러리로 만드는 상황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질 것이 뻔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만을 학습시킬 반교육적인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해라. 하지만 그 방식은 마음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논리야말로 독재를 민주주의의 거짓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곤 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

하나, 학생들을 직접 때리지 않고 고통을 주는 이른바 ‘굴리는’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꼼수로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 체벌을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로 스스로 정의한 적이 있으며, 직접 때리는 체벌과 학생들에게 ‘기합’, ‘얼차려’ 등을 주는 굴리는 체벌 사이에는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갑자기 ‘때리는’ 체벌과 ‘굴리는’ 체벌을 나누고 ‘굴리는’ 체벌만 허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 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 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그 바로 앞에서는 대표적 ‘기합’인 “팔굽혀펴기”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시행령 개악안 또한 직접 때리는 행위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직접 ‘가격’ 하지만 않으면 학생에게 어떤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더라도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07년 부산에서, 2010년 김포에서, 학생들이 ‘오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체벌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때리는 ‘체벌이든’ 굴리는 ‘체벌이든’ 학생들에게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며 반교육 반인권적이라는 점은 별 차이가 없다.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체벌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굴리는 ‘체벌이든’ 때리는 ‘체벌이든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체벌에 ‘직접’·‘간접’ 이름을 붙이며 체벌을 허용하려는 해괴한 시도를 할 시간과 노력을, 체벌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학교문화의 선진화” 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내용의 실상을 보면 학생인권의 무력화, 학교독재 강화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과부의 꼼수는 초중등 교육기본법 개악을 시도하다 국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행정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 개악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서부터 이미

드러났다. 또한 학생인권에 적대적 부정적 입장을 내온 단체 일색이었던 ‘학생권리 신장방안 마련 관계자회의’로 시행령의 의견수렴 절차를 대신하려 했던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번 시행령 개악의 추진과정은 형식적 절차마저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 없이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교과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을 더 세련되게 잘 침해하고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연구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침해할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교과부의 학생인권 조례 무력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시행령 개악을 막기 위해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반인권 반민주 반교육 시행령 개악을 철회하라!

2011년 1월 18일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